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1117-14

제6차 국가보고서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정부

CONTENTS

제1조 및 제4조	
질의 2 고문의 범죄화 및 처벌 관련 주요 형법 개정사항	4
질의 3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5
제2조	
질의 4 수용자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때부터 모든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7
질의 5 고 백남기씨 사건 관련 후속조치	13
질의 6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및 고 백남기씨 사건 이후 집회 관리 조치	15
질의 7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현황	16
질의 8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처리	17
질의 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19
제3조	
질의 10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개선 조치	21
제10조	
질의 11 법집행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교육	25
제11조	
질의 12 인신구속 대안, 과밀수용, 독방구금, 보호장비 및 수용자 인권 현황	27
질의 13 독방 수용 기간, 수감자의 검진사항 및 징벌위원회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9
질의 14 대용감방 폐지 현황	30
질의 15 교정시설 내 사망 사건 현황 및 예방조치	31
질의 16 사형제 폐지 계획 및 사형수 정보	33

제12조 및 제13조

질의 17 군대 내 인권침해 대응 조치	35
-----------------------	----

제14조

질의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피해구제 조치	38
----------------------------------	----

제16조

질의 19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40
질의 20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및 기타 보호조치	43
질의 21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이민자 구금시설 개선 조치	46
질의 22 인신매매 범죄화 및 퇴치 노력	48
질의 23 법률적·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조치	51
질의 24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군사 재판 및 영창제도 현황	52
질의 25 정신건강보건의법 개정 및 비자의 입원 조치 현황	54

기타 쟁점

질의 26 테러방지법 현황	57
질의 27 코로나19 확산 등 비상사태에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노인요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조치	59

부록

60

영문본

81

- 1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으로서 고문방지협약 제19조에 따라 제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및 고문방지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하였다.

제1조 및 제4조



질의 2.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7~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고문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의 정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등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특정한 사람들 이외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문을 정의하기 위한 「형법」 개정
- (b) 국내 「형법」에 따라 기소된 고문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의 개정이 있었는지 여부(A/HRC/37/11, para. 132.91)



- (a)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문을 정의하기 위한 형법 개정
- 2 현행 「형법」 제125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보조하는 사람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제12조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규정으로 모든 고문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이하 ‘가혹행위’라 함)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로 의율하여 처벌 가능하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가혹한 행위’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모든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재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형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약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약칭)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등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정의규정 신설 필요성은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b) 고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보장했는지

- 3 지난 보고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 개정은 없었다. 다만 「형법」 제125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 제4조의2는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상한을 두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가혹행위일지라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 폭행죄(「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해 2배 이상 법정형의 상한을 가중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고문 또는 가혹행위로 상해에 이르는 경우 법정형에 상한이 없는 「특가법」 제4조의2를 적용받으며, 법원이 개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처벌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질의 3.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9~10번 문단)와 관련하여 고문 금지는 절대적이고 훼손 불가능한 원칙이며, 「국제형사범죄법」 제6조 외에도 고문 행위, 고문 시도 또는 고문의 종범 및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대상기간 중 개정된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 4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이하 ‘집단살해죄등’이라 함)[같은 법 제8조(집단살해죄)부터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까지의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포함된 고문범죄(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그러나, 이는 「국제형사범죄법」 상의 집단살해죄등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이 있는 행위’나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지 그러한 행위가 단지 고문범죄라는 이유로 특별히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국제형사범죄법」 상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밖의 모든 유형의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공소시효 적용 또는 배제 여부가 고문의 정당화에 대한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고, 공소시효 배제 여부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법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고문범죄의 구체적인 유형 별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화한 입법 취지, 고문범죄의 법정형이나 유형·죄질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예컨대, 독직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독직폭행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독직폭행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고문 방지위원회의 견해(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제정안(2020년 7월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가공권력을 이용한 폭행,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2조



질의 4.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1~12번 문단)와 관련하여 청소년, 영장 없이 진행된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구속된 자, 피의자, 미결수용자 등 모든 수용자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때부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 (a) 혐의, 권리의 내용,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받을 권리
- (b) 경찰이나 검찰이 내세운 상당한 이유에 근거가 있을 때도 구금 시점부터 소송단계 전반에서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거나,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격있고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기밀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c) 구금 장소 도착 후 24시간 내 자격 있는 의사에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수용자의 요청 시 독립적인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고문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사가 직접 담당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도 명시
- (d) 체포 후 즉시 가족이나 원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권리
- (e) 체포 후 48시간 이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체포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이 기록될 권리, 변호인과 가족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f)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5 (a) 모든 수용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받을 권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 보호하는 경우 구두 또는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서식, 7개 국어로 번역하여 사용)으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사실과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외국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별도로 지정한 사람에게 또는 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보호된 이후에도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인권국)에 인권침해의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보호실 내에 비치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사관 연락처도 각 보호실 내에

- 비치하여 언제든지 자국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7조에 따라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7 또한,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소정의 교정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장되는 전반적 절차는 <표-1> 참조.
 - 8 경찰은 외국인 형사상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91조제1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217조 규정에 의해 체포·조사 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는 등 외국인이 언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91조제2항 규정에 의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원과의 접견·교통을 할 수 있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양국 간의 영사협약에 따라 피의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비단 체포·조사 시점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9 또한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 체포 시 일명 ‘폴리폰’(신원 및 수배사실 확인, 차량번호판 조회 등 외근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활용, 살인 등 33개 죄종에 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6개국 언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체포 직후부터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자신의 혐의 및 권리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0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7조제4항, 제5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경찰 구금시설인 유치장에 처음으로 입감될 때에는 변호인 및 가족, 친지 등과의 면회 등 유치장 안에서의 각종 권리를 기재한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 및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외국어로 번역·게시하였고, 신체검사실에는 신체검사 방법·절차·사유 등이 기재된 외국어 안내문을 비치 중이며, 유치인보호관들이 유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유치장 생활안내서’(유치장 근무 시 상황별 질문을 영어, 중국어 등 8개 국어로 정리)를 2018년도 제작하여 유치장에 일괄 배부함으로써 외국인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유치장 또는 체포현장 등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역서비스(관광안내전화, bbb Korea 등) 또는 휴대폰 통역 App을 적극 활용하도록 경찰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b) 무료 법률구조 및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11 대한민국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의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경찰 검찰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위법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 12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대검찰청은 2017년 12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5월에는 변호인의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나아가 2019년 10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 확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 최소화,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직접적 구두변론 기회 전면 부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에는 위 내용을 명문화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 예규)을 시행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 시행하여, 피의자 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 도피, 중요 참고인 위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13 특히 구금된 자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8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인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추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14 현행 「형사소송법」 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무료 법률구조)를 인정하고, 피의자의 국선변호(무료 법률구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와 체포·적부심절차(「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무료 법률구조)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신설한 취지에 따라 경찰은 변호인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2018년 3월 7일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c) 구금장소 도착 후 24시간 내 의사에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 15 「형집행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3일 이내) 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정시설 내 의사(의무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16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47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해 <표-3> 참조.
- 17 「형사소송법」 제34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유치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질병·상해 등을 이유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치장에 게시 중인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안내문에도 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치인이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유치인이 의약품 복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약물의 처방전 및 병원·약국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외국인 근로자·난민 등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및 수술비,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 및 응급치료가 필요한 유치인이 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 처치료를 우선 의료기관에서 지불하게 한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나중에 유치인으로부터 상환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활용하는 등 유치인 건강권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수용자의 요청 시 독립적인 의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18 수용자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정시설 내 의사(의무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형집행법」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고문에 의한 부상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사가 직접 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 19 진료기록이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소장의 허가를 거쳐 의사(의무관)가 검사에게 임의제출할 수 있다.

(d) 체포 즉시 체포 사실을 알릴 권리

- 20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 등이 통지를 받는 권리는 「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의6조, 제201의2조제10항, 제209조, 제213의2조, 제87조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와 변호사 등 체포적부심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57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e)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받을 권리

- 22 대한민국은 체포와 구속이 구분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구속영장제도, 체포적부심 등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2항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해 보장된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체포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이 기록될 권리

- 23 대한민국에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80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관련 서식에 체포일시 및 장소, 인치·구금할 장소 등 체포된 즉시 이송을 포함한 모든 구금 사실이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4 구금되어 교정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에 기록 및 입력하고 있고, 교정시설 간 이송되는 경우 또한 기록 및 입력되고 있다.
- 25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범인 체포서, 긴급체포서 서식에 체포 일시·장소, 인치·구금한 일시·장소, 체포자 관직·성명 등 체포 및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직접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도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자적으로도 기록·관리되고 있다. 이렇듯

- 경찰에서는 모든 체포·구속 시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체포 유형의 석방서 서식을 통해 석방에 관한 사항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 26 경찰 유치장의 경우에도 피의자를 입감(구금)할 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감지휘서 서식에 의해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입감지휘서에 입감(출감도 동일) 일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입감 일시 등 구금과 관련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것을 유치인보호주무자(주간 수사과장, 일과 후 및 공휴일 경찰서 상황관리관)가 확인 및 점검하도록 하는 등 모든 구금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27 피의자는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송치여부, 검사실 배당, 기소여부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시스템에서 대리인(변호인, 가족 등)을 지정할 경우(수사기관, 사건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변호인 등록번호 등 입력) 대리인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회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공하는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에는 구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금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위 조회와는 별개로 체포 구속 시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구금사실, 구금장소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있다.

(f) 변호사 조력으로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28 피의자가 구금에 대한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가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찰관은 피의자와 위 열거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 등을 조사한 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은 이러한 심문절차에 출석하여 피의자 구금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인 조력에 의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 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3~14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2016. 9. 25. 경찰이 쓴 고압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건에서 2018년 6월 5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지방법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경관 2인에게 선고된 형,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세 경관에 대한 조치(14(d)번 문단), 위에 언급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과실에 비하여 선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2018년 6월 8일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의 결과, 물대포 조종을 배정받은 시위진압 경찰의 훈련 부족과 안전점검 미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8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백남기 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29 고 백남기씨 사건 관련자 판결 및 조치 경과
- 대한민국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 농민을 직사 살수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운용지침(가슴 윗부분 직사금지)을 위반하고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2017. 10. 17.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前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2019. 8. 9.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벌금 700~1,000만 원)를 선고하고, 특히 총괄책임자인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과잉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9. 8. 13.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시위진압 경찰의 훈련 부족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 30 모든 경찰부대에 대해 상·하반기 각 4~10주간의 ‘집중교육’ 기간을 지정하여 ①인권·안전교육, ②법과 원칙에 따른 현장대응 시뮬레이션 훈련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통계 <표-4> 참조)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8가지 권고 이행상황

- 31 대한민국 경찰은 2017. 8. 25.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2018. 2. 1.부터

2018. 8. 20.까지 6개월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8. 8. 20.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행위와, 상급자가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경찰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것 등 8개 사항을 권고하여 <표-5> 참조) 그 중 7개 권고를 이행하였다. 다만, 법률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고사항 중 국가가 제기한 소송의 취하와 관련된 내용은, 당해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 종결되었다.

백남기씨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죄에 관한 정보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2018. 1. 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액 4억 9천만원(약 41만 미국 달러)을 지급하였다.

경찰은 2017. 6. 16.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경찰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 후 2017.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를 맞아 재차 사과하였고, 2017. 10. 17. 검찰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 후 다시 사과하였다. 2019. 7. 26.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다.



질의 6.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3~14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다음을 요청한다.

- (a) 1주기 추모집회 중이었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롯하여 조사기간 중 물대포 발사와 최루액 분사 등 과잉진압에 대한 진정 및 조사 내역,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최신 정보
- (b) 경찰관들이 무력과 화기 사용 및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지에 관한 정보
- (c) 물대포 조종에 관한 기동대 훈련을 포함하여, 집회 관리 전술이 재검토된 적 있는지와 백남기 씨 사망 이후 안전점검이 더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 32 (a)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진정 및 조사 내역**
-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위원장 성명으로 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2015년 4월 1주기에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입법 정비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감시하기 위하여 1주기 추모집회를 비롯한 관련 집회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였다.

——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최신 정보**

- 33 2015년 9월~2017년 4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총 299명 중 121명의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 배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1,078억원)을 제기하였으며, 2018. 7. 19. 1심 국가일부패소(패소액 약 724억원)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재할 및 보상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표-6> 참조.

(b) 경찰관들이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지

- 34 경찰청은 경찰관 인권교육 중기 기본계획(1차 2018~2020)을 수립하고 경찰관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을 제정하여 고문금지 및 적법절차 원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4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인권행동강령 해설서 등을 제작, 배포하고

경찰관 대상으로 고문금지 원칙을 교육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표-7〉 참조) 해설 및 현장 경찰관 대담 형태의 교육 영상을 제작,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의무화 실시하여 고문금지 원칙 등 인권의식을 제고하였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 6시간의 의무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인권 보호 활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교육 외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 교육 콘텐츠를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인권 포켓북을 제작 배포하여 현장 경찰관의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파하여 고문금지 원칙 등의 내용을 숙지토록 하였다.

(c) 집회 관리 전술이 재검토된 적 있는지,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안전점검이 더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 35 경찰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배치·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거리별 수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20년 1월 개정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업무 경험자 등을 선발하여 ‘집회시위 현장안전진단팀’을 신설하여 (〈표-8〉 참조) 등을 통한 참가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집단민원 현장 등에서 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충돌 제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질의 7.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5~16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들어 사람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등으로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조사기간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동법 제7조 ‘찬양·고무’의 모호한 정의에 수정이 있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조사기간 중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했는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동법 제7조 ‘찬양·고무’의 모호한 정의에 수정이 있었는지

- 36 조사 기간 중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한 바 없다. 「국보법」 제1조제2항은 확대해석 금지 등 엄격한 해석·적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보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보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보법」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 37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찬양·고무등)죄로 기소된 인원은 2015년 42명, 2016년 16명, 2017년 11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20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85.7% 감소하였다. 「국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인원 관련 통계는 <표-9> 참조.



질의 8.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9~20번 문단)와 관련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수립되었는지, 해당 제도에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조사기간 중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국, 국방부 인권과에 접수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 건수와 관련 조사내용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도 요청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가 수립되었는지

- 38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구금된 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거나 직권으로 군 교도소, 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진정 조사 시 입회인 없이 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정부 기관 등에 정책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39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법무부 소속 각종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인권국은 법무부 소속 각종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용이하게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무에 관해 <표-10> 참조.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및 관리자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 의뢰, 개선조치 요구, 국가배상 또는 법률구조 안내, 제도개선 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제도에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정보

- 40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침해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이하 '진정인')의 의료증거(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구금시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진정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금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접수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진정 건수와 관련 조사내용 및 결과 정보

- 4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형법」 및 「특가법」 상 범죄인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접수되어 수사, 기소된 현황은 <표-11>과 같다.
- 42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표-12>과 같다. 본 현황의 '고문 및 가혹행위'의 경우, 과도한 장구 사용, 위법한 체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위 문단의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는 그 범위를 달리함을 밝힌다.
- 4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장 권리구제 중 제101조에 의해 처우에 관하여 소장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제10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그 처우에 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군 인권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34호) 제47조에 따라, 군 교정시설 수용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은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7건이 처리되었고, 이 중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건은 0건이며, 위 진정사건은 대부분 처우개선에 관한 건이다.



질의 9.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43~44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깨끗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 선정과 임명 과정이 수립되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었는지, 이를 수행할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지 시찰을
몇 차례 수행했는지 밝히고, 조사기간 중 당국이 어떤 고문방지
관련 권고를 이행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놓고 검토한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추가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s. 130.12-130.14).



- 4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지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임명과정**
-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 2.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였다.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자격 기준에는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도 포함하여, 인권옹호자 역시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정보**
- 45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리감독에 관해서는 38문단 참조.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모두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우편·방문·이메일·홈페이지·팩스·방문진정접수·진정함 설치 등 접수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진정 접수를 활성화하였다.

- 조사기간 중 당국이 어떤 고문방지 관련 권고를 이행했는지 예시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과 관련하여 총 46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청 및 경찰청을 대상으로 구제조치 권고·징계권고·수사의뢰·고발하였다. 이 중 구제조치 권고·징계권고 38건 중 일부수용 2건, 불수용 2건을 제외한 34건이 수용되었으며,

고문방지 관련 권고에 대한 이행으로 피진정인 개별조치, 조사·장구 사용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인권교육, 고문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이 이루어졌다. (개별 권고 내역은 부록 <표-13> 참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내용 명시

- 4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에 부여한 권한은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관련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에 따라 수립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38번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규정한 국가예방기구(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내 구금 시설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독립적 기구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는바,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 47 정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NAP’)을 수립하였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2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과제별로 유관 시민단체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 총 18회의 간담회를 거쳐 수립된 제3차 NAP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다수 수록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검토, 집회시위 현장 법 집행의 적법성·책임성 제고 및 집회시위 관련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을 통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 법제 정비 등이 있다. 아울러 제3차 NAP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포함한 국제협약기구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발표한 최종견해들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이를 널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조



질의 10.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17~1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여전히 탈북자를 탈북 후 최대 6개월간 합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를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구금 최대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및 보고대상기간중 관련 사건의 수
- (b) 심문과 구금 중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 등 탈북자에게 기본적인 법적 보호가 제공되는지, 심문 시간과 방식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c) 탈북자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심리 중 결정 중지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부 2인 송환 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사전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d) 덧붙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 대부분을 없애고, 출입국향의 난민신청자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독립적인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구를 설치하고,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고, 고문 피해 사실 확인 능력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500인의 현황에 관한 정보도 요청한다.



(a) 탈북자를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지, 무기한 구금 가능 여부, 구금 최대 시한

- 48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보호·지원여부(정착금, 임대주택 등)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일 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도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어 강제성 있는 구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 국내 입국 후 180일 이내였던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국내입국 후 9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2019년 6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NGO보고서는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통일부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 입소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의 보호 여부 결정은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임시보호 및 조사가 끝나면 보호 결정 전이라도 즉시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생활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임시보호·조사를 종료하였음에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무기한 임시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9 또한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정원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임시보호기간 동안 외부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 또는 면회를 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임시보호기간은 국내 입국 후 60일 정도이다.

—— 보고대상기간 중 관련 사건의 수

- 50 2018년 2월 개정된 위 시행령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조사·임시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90일이고, 평균적으로는 60일 내외이다. 따라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이 6개월 동안 조사·임시보호한 북한이탈주민은 없다.

(b) 심문과 구금 중 탈북자의 기본적인 법적 보호

- 51 국가정보원은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임시보호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감시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과 1: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그간 국가정보원 내부지침으로 정해온 인권보호관의 업무, 자격, 임기, 독립적 지위 등을 2019. 7. 16. 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52 인권보호관 위촉은 위 시행령 제12조의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인권보호관 자격 기준은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 10년 이상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또한 위촉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현재 외부 여성변호사가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되어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탈북자 심문 시간과 방식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53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보호·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표-14> 참조.

(c) 탈북자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심리 중 결정 중지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부 2인 송환 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사전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54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동해 NLL 남방으로 도주해 온 북한선원 2명을 2019. 11. 7. 북한으로 추방하였다. 동 건은 북한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정부는 흉악범죄자인 북한주민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추방결정 과정에서 상기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하여 「헌법」 및 국내·외 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금번 추방 조치는 남북관계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d)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수정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

- 55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호주·독일의 난민법령, EU 난민인정절차지침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법령개정 등 검토를 지속 중이다. 한편, 2015. 6. 18.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호 규정을 삭제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수용 여건 개선

- 56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생활 시설과 편의시설(표-15) 참조)이 구비된 난민신청자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향상

- 57 더불어 1차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무부는 난민심사담당자의 난민인정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전담공무원의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연간 50시간 이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UNHCR과 공동으로 난민전담공무원 대상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16) 참조) 난민심사 시 통역품질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전문통역사, 지역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난민통역인의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독립적인 난민심사 이의신청 기구 설치

- 58 2020년 2월, 법무부 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제도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난민심의과’)를 1차 난민심사 제도 운영 부서와 분리·신설하여 독립적인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4월, 이의신청 심의 기구인 난민위원회(표-17) 참조)의 상정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전원 위촉직(민간) 위원으로 지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2020년 7월, 난민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이의신청 심의 안건에 대한 외부 자문을 확대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500인의 현황에 관한 정보

59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현황은 <표-18>과 같다.

제10조



질의 11.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45~46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법집행공무원, 특히 긴급체포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과 고문방지협약 조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해당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
-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가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의료진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필수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교육에 참여한 의료진 수
- (c)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효과성과 고문 사건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a) 자유가 박탈된 자와 접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방지협약 교육 실시 여부 및 해당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

- 60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담별 전문교육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요 법령, 실무 적용례 및 인권침해 감찰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와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본건 수사를 위한 별건 수사의 부당한 이용 금지, 본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을 배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보가 ‘실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법원의 재판 전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공개소환이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하여 망신주기식 수사나 초상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피조사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롤플레이잉 조사실습’을 실시하여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스스로 인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직, 교정직 등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사용법 및 정신질환 수용자,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검찰 공무원

각 직렬 기초 교육과정에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 편성하여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2020년 총 16,66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b) 고문방지 지침서가 의료진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교육 참석 의료진 수

- 61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의료인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신규면허취득자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유예·면제 대상자 제외),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문성과 더불어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2018. 1. 1. 시행)을 개정하여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등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문방지 지침서는 필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개정된 의료인의 보수교육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수 교육과정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62 법무부 소속 각 교정기관에서는 의무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문·가혹행위 금지 등을 비롯한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의무관(10명 내외) 및 공중보건직(30명 내외)에 대해 젠더 커뮤니케이션, 수용자 의료정책 및 의무관의 역할, 교정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처우 향상 및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구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c) 공무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효과성 및 고문 사건 감소 효과 평가 체계 수립 여부

- 63 법무·검찰 공무원의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과정과 강의에 대한 설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항목에는 교육의 기간, 내용,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등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강사의 강의력, 담당 직원의 충분한 지원 등 운영적인 항목, 교육 및 편의시설, 급식 등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도 편성하여 교육 전반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은 차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선 기관으로 복귀한 교육 수료생 및 주변 동료, 상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현업 적응도 평가를 통해 교육이 실무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1조



질의 12.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1~22번 문단)와 관련하여 보고대상기간 중 인신구속의 대안을 적극 이용하고, 과밀 수용을 줄이고, 재소자에게 할당되는 공간을 확대하고,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교정시설 내 일일 운동, 재활, 재통합 교육을 설계하고, 교도관과 의료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늘리고, 보호구와 구속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64 보고대상기간 중 인신구속의 대안 적극 이용 조치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신청기준 완화, 단기수형자 가석방 심사 도입 등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표-19〉 참조)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재소자에게 할당되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유희공간 리모델링·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관련해서는 〈표-20〉 참조.

과밀수용을 줄이는 등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

65 교정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LED조명 설치, 난방 개선, 화장실 양변기 설치 등 시설·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8조(개인위생), 제19조(의류 및 침구)와 관련해서도 공동세탁기 설치, 반팔티셔츠 지급, 개인용 식판 보급 등 위생증진 및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후로도 현행 법령, 수용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교정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내 일일 운동, 재활, 재통합 교육 설계 등을 위한 조치

수용자는 매일 1시간 이내 정기적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사회견학 및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사회적 처우를 통해 수형생활로 인해 수형자가 느낄 수 있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최소화함으로써, 출소 후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처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도관과 의료인력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66 교도관은 보고대상 기간 동안 총 575명을 증원하였다. 의료인력은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의무관의 직급과 보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교도관 및 의료인력 확보 관련한 통계는 <표-21> 참조.

외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늘리기 위한 조치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등 외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는 교정 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원격 화상진료의 경우는 2020년 11월 47개 교정기관 및 31개 협력 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2017년 14,377건에서 2020년 24,08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송진료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진료가 줄어들면서 37,101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 37,403건에서 2019년 39,824건으로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보호구와 구속구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67 보호구와 구속구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형집행법」 제97조에서 제99조까지 사용 요건, 남용 금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캠코더, 바디캠 등 영상장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는 90일 이상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1일 4회 이상 보호장비 계속 사용 여부를 심사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시간 동정을 관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질의 13.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3~24번 문단)와 관련하여 독방 수용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갇힌이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며,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자격 있는 의료인이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매일 검사하는지, 징벌 대상 수감자에 독립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와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 68 독방 수용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독방구금(금치)은 규율위반의 경중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법무부는 징벌 중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독방 수용 관련 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

2020. 2. 4., 「형집행법」 제112조제4항 및 제5항 개정을 통하여,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자격있는 의료인이 독방에 감금된 수감자의 상태를 매일 검사하는지

「형집행법」 제1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4항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의무관이 금치 집행 전·후는 물론 집행 중에도 수시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고 있다.

징벌 대상 수감자에게 독립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와 징벌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형집행법」 제111조(징벌위원회) 제6항에 따라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9 징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에 의거,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도록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벌의결을 요구한 소장 및 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징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외부위원은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업무 관련 금품수수나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말로써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그 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벌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의 경우 <표-22> 참조.



질의 14.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5~26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대용감방’ 2곳 폐쇄에 차질을 빚게 했던 예산 부족 문제가 보고대상기간 중 해결되었는지 여부 등 남아 있는 ‘대용감방’ 폐지에 관한 최신 정보 및 모든 지역과 관할권에 적절한 물리적 여건을 갖춘 구치소와 교도소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당사국이 1실 당 교도관 수를 증원했는지, 남아 있는 ‘대용감방’ 1곳을 비롯해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이 있는 모든 구금 장소를 여성 교도관이 감독하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대용감방’ 2곳 폐쇄 관련 예산부족 문제 해결 현황 및 ‘대용감방’ 폐지에 관한 최신 정보

- 70 정부는 그간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하여 왔다. 남아있던 4개 경찰서의 수용자들까지 모두 인수함으로써 2021년 4월 현재 대용감방을 모두 폐지하였다.

모든 지역과 관할권에 적절한 물리적 여건을 갖춘 구치소와 교도소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최신 정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2020년 속초에 강원북부교도소를 개청하였고, 화성, 태백, 경기북부 등 5개 교정시설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이전·재건축(8개 기관) 및 증·개축(6개 기관)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당사국이 1실 당 교도관 수를 증원했는지

교도관 수에 관련해서 66문단 답변 참조.

남아 있는 ‘대용감방’ 1곳을 비롯해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이 있는 모든 구금 장소를 여성 교도관이 감독하는지

2020년 8월 남아있던 대용감방 4곳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서 모두 인수하였고, 형집행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1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7~28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미결수용자 수용시설과 교정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설별 수용자 사망 건수, 사망 원인과 유형,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사망사건 조사 결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보고대상기간 중 질병이 있거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등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b) 자살, 돌연사,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인한 죽음 등 구속 수사 중인 자 및 복역 중인 자의 사망을 신속하게 조사하는지, 고문 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기소하는지, 유죄판결이 난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벌하는지 여부
- (c) 구금 중 사망 사건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하는지, 유족에게 부검보고서가 송부되는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a) 미결수 수용시설, 교정시설 모두 포함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시설별 수용자 사망건수 및 사망원인과 유형 관련 정보

71 교정시설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은 <표-23>과 같다.

—— 교정시설 사망사건 관련, 사망자의 나이와 성별, 사망사건 조사결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정보

72 교정시설 사망자 중 19세 이상 40세 미만 5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54명, 60세 이상 39명이며, 그 중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96명임. 사망 사건에 대하여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결과 보고 및 내사 종결 처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 수용 중 사망에 따른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은 총 13건이 제기되어 9건이 종료되고 4건이 진행 중이다. 종료된 9건의 국가배상소송 중 2건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어 배상했다.

—— **질병이 있거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 정보**

- 73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격화상진료의 경우 2020년 47개 교정기관(2021년 전 교정기관 확대 실시 예정)에서 원격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격화상진료 관련 통계는 16문단 답변 참조.

——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

- 74 교정시설 내 의무관 진료, 외부병원 이송진료, 초빙진료, 원격 화상진료, 모든 수용자 대상 외부기관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혈액투석실 운영, 원격의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처우를 실시하여 자살을 비롯한 수용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대면상담, 생명의 전화, 화상상담을 통해 자살우려 수용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수용자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b) 자살, 돌연사,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인한 죽음 등 구속 수사 중인 자 및 복역 중인 자의 사망을 신속하게 조사하는지

- 75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수용자 사망사고에 교도관의 직무위반이 있는 경우 상급 감독기관인 지방교정청에서 사망경위, 근무자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고문 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기소하는지**

- 76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은 「형법」 제124조, 제125조, 「특가법」 제4조의2(「형법」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의해 처벌된다.

—— **유죄판결이 난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벌하는지 여부**

- 77 보고대상 기간(2017년 5월~현재) 동안 구속 또는 수감 중인 자의 사망과 관련된 고문행위,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또는 고의적 방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기소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c) 구금 중 사망 사건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하는지

- 78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 부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 98건 중 유족의 부검 동의 여부, 의사의 부검 필요 소견 등을 고려하여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였다.

—— 유족에게 부검보고서가 송부되는지

- 79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인에 의문이 있는 사체 등에 대해서는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지닌 검사가 사체를 검시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에 근거하여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검을 실시하기 전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 결과 등을 설명하여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서면으로 된 부검보고서를 유족에게 송부하고 있지는 않다.

—— 유족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인 부검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 80 구금 중 수용자 사망사고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사인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교정시설 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사체를 독립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사망 98명 중 부검 인원은 총 71명이며, 모두 독립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질의 16.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29~30번 문단)와 관련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고, 유엔 총회의 반복적인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 투표를 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한 내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s. 132.70-132.89). 사형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법정에서 여전히 사형이 선고되는지,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몇 명이나 감형을 받았는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전에 사형수였던 수형자들이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는 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사형제 폐지 관련 검토 정보

- 81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공감하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형수 인원, 사형 선고 현황, 징역형 감형 여부 등

- 82 2021. 4. 28. 현재 미집행 사형수 인원은 55명이고, 2017년 5월 이후 사형 선고 사례 및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없다. 그와 별개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 인원은 4명이고, 2016년 2월 이후 사형 선고 사례 및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례는 없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형수였던 수형자들이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수감 생활을 하는지

- 83 사형확정자의 거실지정, 종교활동, 실외운동, 식사, 진료, 편지수수 등 일반적인 처우는 수형자와 동일하며, 1인당 수용관리 예산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심층 상담, 외부전문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12조와 제13조



질의 17.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5~36번 문단)와 당사국이 제공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CAT/C/KOR/CO/3-5/Add.1)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군대 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등 학대와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및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놓고 검토한 내용 (A/HRC/37/11, paras. 132.66-132.68)
- (b) 2017년 8월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인권보호관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했는지 여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3건의 처리 결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대 내 학대와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될지 여부
- (c)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설치한 국방 ‘헬프콜’ 등 부대 내 폭력을 예방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 군대 내 인권 존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게시한 연구사업의 결과, 관련 조치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a) 군대 내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84 정부는 군대 내에서 폭력·성희롱·성폭력·가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군형법」을 개정하여 병영 내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 시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2016. 3. 29.)하여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기본권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신고의무와 신고자를 보호 조치토록 명시하는 등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 직접 가해자와 1) 지휘 계통에 속한 인물들의 책임을 설정하며, 2) 행위의 엄중함에 맞는 형벌로 책임있는 인물을 기소 및 처벌하고, 3) 해당 수사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는지

85 국방부는 군내 폭언과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에 관하여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표-24〉 참조)에서 사고의 정도에 따라 1차, 2차 및 3차 지휘·감독자와 관련 참모까지의 지휘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지휘 계통에 속한 자들을 문책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표-25〉와 같이 공개를 원칙으로

- 86 하며,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판결문을 통하여 처벌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여 (2018. 9. 3.) 군내 성인지적 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性)관련 고충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지원을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에 관한 장병들의 인식, 피해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수요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을 증원하였다.
- 87 나아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시점 명확화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각종 지침 마련 및 법령개정을 하였다.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검토 내용

- 88 한국군은 장병들의 동성에 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 의 경우 군 기강을 저해하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장병들의 동성에 성향에 따른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화하여 유의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253조) 다만 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 군은 과잉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및 기소 시에 추행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추행죄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 89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폐지 여부는 동 규정의 보호법익, 입법취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 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등), 국방부는 추행죄에 대한 단속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처벌한 건수는 2018년 5건, 2019년 2건이다.

(b) 군인권보호관 신설 여부

- 90 정부는 현재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 5월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1건과 국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1건이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방부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3건의 처리 결과

- 91 기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 군인권보호관의 권한과 법적 지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대 내 학대와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될지 여부

- 92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내 인권침해 사건 관련 조사 실시 내용은 38 문단 참조.

(c) 국방 ‘헬프콜’ 등 부대 내 폭력을 예방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

- 93 국방헬프콜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제173조의2(운영 현황은 <표-26> 참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내 소통채널이다.

—— 군대 내 인권 존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개시한 연구사업의 결과

- 94 장병들의 군 생활 및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장병 복지 및 인권 사항 개선에 관한 국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주관으로 2017. 9. 11.부터 9. 30.까지 간부 1,764명, 병사 3,917명에 대하여 면접원 부대 방문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중 구타 및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27>과 같다.

—— 관련 조치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 95 2018년 국방부-한국국방연구원 공동 주관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하여, 병사는 2017년 7.5%에서 2018년 6.8%로, 간부는 2017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4조



질의 18. 본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47~48번 문단)를 상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당사국이 2017년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38명이었던 생존자가 현재는 20명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당사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20명과 유족에게 협약 제14조 이행에 관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2012)에 따라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비롯한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고, 이것이 생존자 및 유족이 요구하는 바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덧붙여 공식적인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전문 재활 서비스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등의 피해구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재활 프로그램을 수립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국제협약에 따른 보상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

- 96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당사자,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3위원회, 안보리 공개토의 등 다양한 계기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왔다.

피해구제 제공 등이 생존자 및 유족이 요구하는 바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9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 최초 특별지원금 4,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병원 치료 및 간병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서 지원을 위해 정기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매년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의 총괄·집적, 후속연구의 체계적 진행 및 향후 후세대 교육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설치(2018년 8월~) 운영 중이다.(관련 주요 사업은 <표-28> 참조)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전시, 청소년 작품공모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연중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식적인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고문방지협약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대한 집행력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재할 프로그램을 수립했는지

일제하 「위안부피해자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의무로 <표-29>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하며,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에 따라 <표-30>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사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에 따라 <표-31>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16조



질의 19.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7~38번 문단)와 관련하여 여성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배우자 강간이 「형법」 상 개별 범죄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 132.92). 가정폭력 피해자가 금지명령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충분한 기금으로 뒷받침되는 쉼터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 98 정부는 2018년 11월 정부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 ‘가정폭력 방지대책’ 내용을 조문화하여 2019년 11월 20대 국회 및 2020년 9월 21대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상 현행법 체포 명시 등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등 임시조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발의 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0월 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2021년 1월 시행).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추가적 조치

- 99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추행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특수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 100 2020년 5월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13세→16세 미만), 중대 성폭력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소지죄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개정, 시행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기타 여성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01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20년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주요 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 102 경찰 역시 치안수요자인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경찰청은 2019년 5월 여성대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안전기획관” 조직을 신설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전국 시·도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및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8년 상반기에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강력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오프라인 촬영자 및 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847명을 검거하였고, 음란사이트 150개의 DNS 접속을 차단하고 92개를 폐쇄하였다. 2019년에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집중단속’을 계속하여 웹하드 62개를 단속하고, 운영자 119명 및 헤비업로더 등 947명을 검거하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야기된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을 설치·운영하여 총 2,807건을 단속, 3,575명을 검거하였으며, 총 51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 피해자 담당 경찰을 지정하여 신고 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 1,094명 대상으로 피해영상 삭제·전문기관 연계 등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지속 확대해 집중수사를 전개하고, 수사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며,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 103 정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한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검사의 사후승인 청구, 법원의 사후승인 필요),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104 대검찰청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검찰 내부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전담 검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젠더 폭력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지시 및 교육하였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2020. 4. 9. 시행)함으로써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고 있다.

배우자 강간이 「형법」상 개별 범죄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최신 정보

- 105 현행법상 부부강간 처벌이 가능하고, 대법원 또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2012도14788 판결)하는 등으로, 별도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금지 명령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106 현행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2020년 10월 공포, 2021년 1월 시행)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또한, 위 개정을 통해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위반 때 형사 처벌하도록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지

- 107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0년말 기준 전국에 65개소의 보호시설(쉼터)을 운영 중이며, 344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질의 20.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9~40번 문단)와 관련하여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성폭력, 부당한 대우, 개인적인 문서 압수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주노동자가 법률 서비스와 통역 서비스를 비롯한 사법 지원, 정부 지원 센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당한 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학대를 가한 고용주가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조사기간 중 기소된 적이 있는지 명시하고, 관련 소송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성폭력, 부당한 대우, 개인적인 문서 압수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08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등을 여성가족부와 합동 점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6월)을 통해 성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예술·홍행 분야 종사자(E-6)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래의 체류자격의 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능할 경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109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부당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5조), 2021년 4월부터는 그 사유를 임금체불·성폭력 등 36가지로 확대하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부당한 처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에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과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하였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 및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16개 송출국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입국 초기에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시 성폭력·부당한 대우·개인적인 문서 압수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폭력·부당한 대우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용허가 취소된 사업주 및 개인적인 문서 압수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긴급사업장변경)하여 가해자와 신속하게 격리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소)에 상담자를 지정하여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센터(16개국 언어지원)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성폭력 피해 외국인노동자의 보호시설, 쉼터 등)과도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법률 서비스를 비롯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0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표-32> 참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피해외국인근로자 39,466명의 소송대리 지원, 선원 231명에 대한 소송대리를 지원하였다. 외국인근로자통역지원센터(노사발전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통역지원을 받아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정부 지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1 외국인력상담센터(1개소)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4개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방·전화·방문상담 중 이주노동자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소)는 상담 전담자를 지정하여 성폭력, 부당한 대우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쉼터 운영기관의 연락처와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쉼터 운영기관은 노동자의 입소 의사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거처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전국 17개소<표-33> 참조, '21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쉼터는 사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E-9, H-2)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약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21년 기준)하여 각 쉼터 운영기관에 부식비(매월 3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1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적용사업장 고용 시 가입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체류자격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당연 가입하도록 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가 타당한 기간 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13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표-34> 참조. 특히, 2021년 4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농지법」·「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농한기·금어기 등 사유로 권고되사,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미가입을 추가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를 36가지로 확대하였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결과, 외국인근로자(E-9)는 매년 5만 건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처리기한 7일 이내)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허가비율은 99.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게 학대를 가한 고용주가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조사기간 중 기소된 적이 있는지 명시하고, 관련 소송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114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조사대상자(신고인, 피신고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즉시 인지된 범죄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기한을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된 건수는 총 19,841건이다.



질의 21.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41~42번 문단)와 관련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커니즘 도입,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결정 중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덧붙여 이민자 구금기간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미성년자가 여전히 구금 대상인지, 조사기간 중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정보 요청

115 55문단 답변을 참조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커니즘 도입

공항만에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지위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결정 중지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송환 절차의 진행은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민자 구금기간 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 116 「출입국관리법」은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집행 확보를 위한 보호를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최대 20일까지로 보호기간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강제퇴거를 통해 출국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은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여 명시적인 보호기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여 법 집행 여부가 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무한정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속히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보호명령의 목적·시간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무부 내부적으로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들을 통해 강제퇴거의 집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55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청구 등을 통해 법원에 보호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사법적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미성년자가 여전히 구금 대상인지

- 117 정부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대한 자제하고, 형사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보호되더라도 지명하여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장기보호를 방지하며,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특별보호방을 배정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금지 원칙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1월부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되어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외국인의 보호를 최소화하며, 또한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 또는 부모를 보호일시해제하여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민자 구금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 118 이민자 보호시설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 서울남부출입국 사무소 보호시설 신축(수용능력 56명), 2022년 하반기 울산사무소 신청사 완공예정 및 보호시설 증축(수용능력 160명)으로 보호외국인 분산 수용 추진 중이다. 또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자해방지용 샤워기 교체 등 수시로 보호시설 정기 점검하여 물리적 여건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 119 또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보호소 내 담당 의사가 수시로 내부진료를 실시하며,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3개 보호시설에 배치하여 보호외국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주 5회 야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한국어교육, 건강관리, 종교·오락 등을 포함한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위생사 자격을 소지한 위생원이 보호소 내 위생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120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접수 및 조사 관련해서는 38 문단 참조. 법무부 인권국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은 보호실 안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대사관 연락처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외부와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질의 22. 당사국에서 인신매매가 형사 범죄인지 명시하고, 인신매매를 퇴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A/HRC/37/11, paras. 130.45–130.47).

인신매매가 형사 범죄인지 명시

- 121 대한민국은 2013. 4. 5. 국가형벌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형법」 제31장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개정·시행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도 다양한 형벌 규정으로 인신매매 범행을 처벌하여 왔으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인신매매죄’를 신설(제289조)하였으며, 인신매매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형법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착취, 장기 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형법」 제292조)하였다.
- 122 나아가 정부는 「형법」 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보호가 미흡하다는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20년 여성가족부 주도 아래 관련 부처 T/F를 구성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정의 규정,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 인신매매 총괄 조정 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뒤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동 법률은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4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23 이 법률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군을 정의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및 외국인 특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자 식별 보호·지원 종합계획 수립절차에 참여하는 한편,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24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써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한민국은 이미 「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해 인신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등 일부 범죄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없어도 인신매매 범죄로 인정되는

피해자 범위를 '아동·장애인'으로 규정하여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규정('아동')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인신매매 퇴치 조치

- 125 대한민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 취업과정 전반을 공공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인신매매, 노동착취 등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향유할 수 있도록 입국 전·후 「노동관계법」 등을 포함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하여,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1,178명(근로감독관 911명, 산업안전감독관 267명)을 증원하였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잠재적 노동착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장시간 근로 및 폭행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근로감독을 통해 22,574개소를 점검하여 총 58,69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고, 2018년에는 26,082개소를 점검하여 70,00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였다.
- 126 특히 인신매매 발생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온 예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반 등을 통해 외국인 연예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E-6 비자 이외에도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사건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 유흥·마사지 업소 및 불법취업알선자 단속기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외국인여성 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강요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있다.
- 127 2019년 5월에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알선자 집중단속, 2019년 6월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 집중단속, 2019년 9월·11월·12월, 2020년 1월·11월 불법유흥 마사지업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였다. 나아가 2019. 11. 2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하여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여러 국가들과 MOU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간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흥행(E-6) 비자 신청 시 영사인터뷰를 통해 비자심사 강화로 연예활동의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최초 입국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사전실시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128 나아가, 법무부는 2020년부터 종전에 체류허가 업무 시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 허용으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예술·흥행 비자 불법체류율이 40% 이상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 사증발급을 제한하며,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연장 등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자신청,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 및 관련 기관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

- 129 대한민국에서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행의 피해자는 성매매행위로 처벌되지 않으며, 「형법」 제12조에 따라 강요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 130 또한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및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여 펴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성매매범죄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여성·아동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성매매사건의 형사절차 개관, 성폭력 피해자 식별 및 지원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 131 또한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법률지원, 숙식 제공과 조속한 귀국 지원을 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위치확인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가 수사단계나 출입국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누리콜센터와 연계하거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제3자 통역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
- 132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없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역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의 범위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이 두려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 안내문(14개 국어) 배부 등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질의 23.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3~34번 문단)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고아원, 아동복지센터, 탁아시설,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법률적·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A/HRC/37/11, para. 130.75).

법률적으로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33 정부는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는 체벌 이외의 훈육방법이 간접체벌이 되지 않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대안적 훈육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가 개정하여 유치원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 134 또한,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온바,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 10. 15.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 1. 8.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135 아울러,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근거를 마련(제22조)하여,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피해 아동의 신속한 분리조치 등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36 정부는 체벌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과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그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및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 137 정부는 유치원,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체벌을 대체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질의 24.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년 군인 50여 명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대 내 성폭행, 언어폭력, 학대, 추행 등의 신체적 폭력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추세를 막고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사법권이 없는 장교가 군사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명시하고, ‘군 수용소 구금’과 ‘교정 훈련’ 명목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병사를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군대 내 폭력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

- 138 국방부는 군대 내 폭행·협박행위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내 폭행·협박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군형법」 제60조의6). 이로써 군대 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대 내 이러한 추세를 막고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 139 현행 법률은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또한 「군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등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그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이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0조). 특히, 국방부 훈령으로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 등 사실을 묵인·방조·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계양정 시 상훈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사법권이 없는 장교가 군사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명시

- 140 현행 법률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를 예외적인 경우(강간과 추행의 죄를 제외한 군형법에 규정된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로만 공소제기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지휘관이 지정한 사건)에만 재판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심판관 제도가 판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개정 전에는 심판관 제도 폐지 취지에 맞춰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7. 7. 7.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평시 심판관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수용소 구금’과 ‘교정 훈련’ 명목으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 없이 병사를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행태에 관한 최신 정보

- 141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의 소지가 있어 구금을 동반하지 않는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률을 2020. 2. 4. 개정 완료하였다. 본 법률 개정에 관련해서는 〈표-35〉 참조.



질의 25.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31~32번 문단)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 (a) 강제입원 요건이 분명하지 않으며 오용되기 쉬워서 환자의 사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2016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법」 특히 제24조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개정된 사항
- (b) 지적장애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강제입원자의 수를 줄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거 강제입원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사기간 중 취한 조치
- (c) 환자가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상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의료당국과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을 추적 관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d) 입원 명령을 내리는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효과적인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 등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당한 사람이 사실상의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 (e)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당한 사람과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건에 대한 모든 진정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진정 처리 및 상담 제도가 조사기간 중 수립되었는지 여부



(a)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제1항과 제2항 개정 사항

- 142 2016년 9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① 입원병원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에게 추가 입원 진단을 받도록 하고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표-36> 참조.

(b) 강제입원수를 줄이고,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 강제입원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143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개선하였다. 우선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치료입원 전 2주간의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진단입원 기간 동안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②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일치된 소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계속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조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 가족,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 결정 후 3일 이내에 입원 사실을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비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만 입원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비자의입원 당시 권리고지를 통해 '입원적합성 조사원 대면조사'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경우 대면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있으며, '18년~'20년 대면조사는 24.7%(실건수: 21,095건)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해 의무직공무원 확충방안, 보수 등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c) 환자가 입원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정신과 의사에게 법원이 자문을 구하고, 의료당국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관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 144 비자의입원의 경우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최초입원 후 3개월 간격으로 2회,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사법입원은 현재의 사법체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인권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준사법입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d) 입원명령을 내리는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입원당한 사람이 사실상의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 145 개정 법률은 당사자의 의사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입원적합성심사 시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대면조사 절차도 도입하였다. 한 각 지자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신보호법」 상 언제든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인권보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제68조에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를 제75조에 격리 등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년 5월~'20년 12월 기간에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결과, 1,051건에 대하여 퇴원결정이 이루어졌다.

(e)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당한 사람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 위반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정 처리 및 상담제도가 수립되었는지

- 146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제2조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가 되면 조사, 관행개선 권고, 정책권고 등 다양한 권고사항이 보건복지부에 내려지며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며 이행하는 형태이다.

기타 쟁점



질의 26. 당사국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한다. 해당 조치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설명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어떻게 해당 조치가 국제법,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했는지 설명을 요청한다. 테러 위협 대응 부문 법 집행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테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률하에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몇 명인지, 대테러 조치 대상자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책과 보호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테러 조치 적용 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

- 147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국가 대테러활동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표-37> 예시 참조.

해당 조치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쳤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148 이러한 조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 등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에서 제시한 테러자금 지원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 또한 국내 일반 범죄사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실질적으로 인권 보호에 별다른 영향을 준 부분은 없다. 일례로 「테러방지법」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없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했는지 설명을 요청

- 149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범죄도 국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피의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제2편 제1장 등에 체포·구속·구금과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동법 을 통하여 변호인 조력권, 무죄추정의 원칙,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구현되고 있다.

- 150 또한,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정보·수사기관 공무원이 테러단체구성죄 등에 대한 무고·위증·증거날조 등의 행위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얻어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테러 위협 대응 부문 법 집행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 151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및 수사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선발된다. 검사와 수사관은 선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 금지, 차별의 금지, 공정한 수사, 원칙적 임의수사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검사는 구속피의자를 면담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테러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하여는, 대테러 매뉴얼을 배포하여 테러관련 범죄의 특징과 대응 절차 및 처리 기준에 대하여 교육하고, 매년 주요 수사사례 및 증거수집 방법,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테러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검사 및 FBI수사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2018년 4월 대테러 전담검사로 구성된 출장단이 미국 법무부 국가안전국 등 대테러 기관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 선진적인 테러 대응·수사 및 예방체계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또는 감독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테러 조치 대상자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책과 보호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 152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 제7조에 따라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인권교육 등 인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민원처리와 관련, 민원인은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작성한 진술서를 접수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이후 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안내·고발이나 수사외뢰·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테러 조치 적용 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 명시할 것

질의와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사례가 없다.



질의 27. 비상사태나 기타 예외적 상황과 관련된 대책의 틀에서도 고문 금지는 절대적이고 훼손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의 의무를 준수하여 정책과 행동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또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노인요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153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표-38> 참조.

【 부 록 】

표 - 1

「형집행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소정의 교정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장되는 전반적 절차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9조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조사대상 수용자에게 조사 이유를 설명한 후 충분한 진술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혐의자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 후, 진술 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통지하고 위 정보를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종료 후, 조사관으로부터 진술의 강요·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거나 유리한 증거 또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한 후 답변을 자필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4. 진술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오기나 증감·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조서에 간인하게 하고 자필로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다.
5. 나아가, 조사 이후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도 구두 및 서면으로 징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형집행법 제116조에 따른 소장 면담, 같은 법 제117조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6. 아울러,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등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7. 한편, 외국인 수용자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 요원으로 지정하여 통역 및 번역하게 하거나 같은 국적의 동료 수용자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적절한 조력과 심신의 안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주요 내용

1. 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변호인의 조언·상담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결정(헌법재판소 2004.9.23. 2000헌마138결정)을 참고하여 변호사의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장시간 신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3.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하기 전에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여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도록 하였으며, 협의 시에는 해당 사건의 죄명, 혐의사실의 요지를 변호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의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등에는 선임된 변호인과 신문 일시·장소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고, 긴급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였고, 기억 환기 차원의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을 경찰관이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근거하여 신문 중 변호인이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승인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은 수사권개혁으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되었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은 피의자의 구금 여부를 떠나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조에 사건관계인(피해자·참고인 등)의 조사·면담 시에도 변호인 참여가 준용된다는 규정을 두어 경찰 조사 시에는 신분상 차별을 두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표 - 3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

년도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항목
2005년부터	22
2019	31
2020	32

* 연간 건강검진 실시 인원은 2005년 20,643명에서 2020년 40,242명으로 증가

표 - 4

경찰 교육관련 통계

		대상	교육기간	총 시간	비고
2019	상반기	전국 경찰부대	3. 4. ~ 3.29.	40시간	
	하반기	전국 경찰부대	9.16. ~ 10.11.	40시간	
2020	상반기	전국 경찰부대	5.18. ~ 7.24.	22시간	코로나19 감안 교육시간 조정
	하반기	전국 경찰부대	10.26. ~ 12.11.	25시간	

* 인권·안전교육 시에는 외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훈련 시에는 모의 상황을 가정하여 부대원 스스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을 도출하는 토론식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교육 외에도 각 부대별로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보호 방안,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적정 물리력 행사 등 인권·안전교육을 수시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 5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8가지 권고 주요 내용

1. 본 사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및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
2. 본 사건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
3.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침을 수립
4.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 금지
5.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이행방안 수립
6. 집회시위 관련,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할 것
7. 집회시위 현장 대응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휘 무전내용 등을 일정기간 보관할 것
8.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 △ 금지통고의 최소화 등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이행할 것

표-6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최신 정보

- ① 국가의 항소 포기 후 원고 일부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18년 12월 이후 기일 추정)
- ② 2019년 4월 세월호 희생자 중 시신 미수습자의 유족 20명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19억원)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③ 2018년 11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중 세월호 특별법상 배상금을 수령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과 위 수령한 배상금 간의 차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소가 약 241억원)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 이후 기일 추정)

표-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구성(총 10개 조문)

1. 인권보호 원칙
2. 적법절차 준수
3. 비례의 원칙
4. 무죄추정의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5. 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6. 차별 금지 및 약자 · 소수자 보호
7.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8. 범죄 피해자 보호
9.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10. 인권교육

표-8

집회시위 현장안전진단팀의 사전 안전진단, 현장 안전활동

- ▶ (사전 안전진단) 집회·행사의 장소·인원·방법(무대·방송차량·시위용품 등) 등에 대한 개괄적 위험요소 분석, 현장 안전진단 범위·방법 등 결정
- ▶ (현장 안전활동) △ 집회·행진 시 주변 지하철 환기구, 맨홀, 건설현장 적치물·낙하물 등 안전위험요소 확인 △ 집회 참가자 차단 시 적정지점, 경력규모·장비 등 현장 안전 확인

표 - 9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기소 등 현황

연도	구분	죄명	기소 인원 (명)	구속 인원 (명)	유죄 확정 인원(명)
20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42	13	8
201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6	10	10
201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1	2	11
20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2	0	4
201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3	0	0
202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6	0	0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외 다른 죄명이 있는 경우 포함

표 - 10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관련

- i) 각 구금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및 면전진정제도(수용자가 진정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면전진정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인권국 조사관이 각 수용시설과 인권국에 구축된 쌍방향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진정내용 파악 및 조사 개시)
- ii) 수신자부담 신고 전화,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및 무료 봉투, 진정함 등을 마련·구축·배포 및 각종 구금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방문 실태조사, 첩보 수집 등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고문 및 부당한 대우를 비롯한 인권침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사건을 직접 확인 및 처리

표 - 11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인 고문 또는 가혹행위와 관련되어 고소·고발 접수되어 수사·기소된 현황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5	직권남용 체포감금	402	450	0	0	0	443	7
	독직폭행 가혹행위	853	877	0	1	0	798	78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23	153	0	0	0	153	0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6	직권남용 체포감금	463	451	0	0	0	442	9
	독직폭행 가혹행위	885	881	0	2	0	811	68
	특가법 (체포·감금)	3	3	0	0	0	3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65	157	0	2	0	144	11
2017	직권남용 체포감금	564	595	0	0	0	572	23
	독직폭행 가혹행위	1,017	1,043	0	1	0	923	119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03	124	0	1	0	112	11
2018	직권남용 체포감금	703	721	0	0	0	650	71
	독직폭행 가혹행위	1,021	1,051	0	2	0	911	138
	특가법 (체포·감금)	5	5	0	0	0	5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19	122	0	1	0	117	4
2019	직권남용 체포감금	682	676	0	1	0	650	25
	독직폭행 가혹행위	1,116	1,119	0	1	0	1,051	67
	특가법 (체포·감금)	0	0	0	0	0	0	0
	특가법 (독직폭행, 가혹행위)	128	119	0	0	0	101	18

표 - 12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기간: 2016~2020)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검찰	11	9	2	3	2	27
경찰	335	275	227	185	228	1,250
합계	346	284	229	188	230	1,277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기간: 2016~2020.10)

(단위 : 건)

종결 년도	구분	합계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권고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전체	1,229	75	28	3	8	36	502	12	622	18
	검찰	26	4	4	-	-	-	11	-	10	1
	경찰	1,203	71	24	3	8	36	491	12	612	17
2016년	소계	362	20	4	-	2	14	156	7	170	9
	검찰	7	-	-	-	-	-	3	-	4	-
	경찰	355	20	4	-	2	14	153	7	166	9
2017년	소계	243	15	4	-	2	9	111	1	111	5
	검찰	7	1	1	-	-	-	4	-	2	-
	경찰	236	14	3	-	2	9	107	1	109	5
2018년	소계	255	14	6	-	2	6	108	4	128	1
	검찰	8	2	2	-	-	-	2	-	3	1
	경찰	247	12	4	-	2	6	106	4	125	-
2019년	소계	204	7	4	-	1	2	72	-	124	1
	검찰	3	1	1	-	-	-	1	-	1	-
	경찰	201	6	3	-	1	2	71	-	123	1
2020년 10월	소계	165	19	10	3	1	5	55	-	89	2
	검찰	1	-	-	-	-	-	1	-	-	-
	경찰	164	19	10	3	1	5	54	-	89	2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2	1	수사의뢰	○○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기타
2003	2	구제조치 권고	관행적인 밤샘조사와 폭언 등 가혹행위 금지를 위하여 직원 인권교육실시 권고	수용
2003	3	수사의뢰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기타
2003	4	수사의뢰	○○ ○○경찰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기타
2003	5	수사의뢰	경찰관 사망사건 조사중 가혹행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기타
2003	6	징계권고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불수용
2004	7	구제조치 권고	조사과정에서 폭언 및 밤샘조사를 행한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및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4	8	구제조치 권고	알몸신체수색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해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경찰총장에게 알몸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일부수용
2005	9	고발	폭행 및 가혹행위에 관련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개시 의뢰하고, 단순가담자 및 지휘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 하고,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자체교육실시를 권고	기타
2005	10	구제조치 권고	강도살인 등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욕설·폭언 및 폭행·협박, 야간조사 등으로 피해자(3명)에게 인격권·휴식권·신체의자유 등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당해사건 수사실무책임자(형사계장) 및 수사담당자 5명에 대한 경고조치 권고	수용
2005	11	구제조치 권고	밤샘조사로 인해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수면권, 휴식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어 피진정인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5	12	구제조치 권고	밤샘조사로 진정인과 ○○○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2005	13	징계권고	폭행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6	1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동의 및 허가절차 없이 밤샘조사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의 자체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 등이 긴급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하자 경찰관들이 구타한 내용으로, 진정인을 구타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고, 또한, 피진정인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 진정의 적대관계자를 압수현장에 참여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탈의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며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압수한 드라이버로 진정인의 목을 찔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7	구제조치 권고	심야조사시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기타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주의조치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6	18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새벽까지 대기하게 한 후 심야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7시간 동안 형사와 대기실에 진정인을 대기하게 한 후 동의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조사한 바,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6	19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없이 진정인을 심야조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해당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자체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0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밤샘조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1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새벽까지 심야조사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2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 수감시 수갑과 포승을 차고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7	23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이 피의자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심야조사하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절차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의 동의없이 심야 조사를 하고,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여 타액을 채취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새벽3시까지 진정인을 심야조사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 되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을 14시간 동안 밤샘 조사하고, 경사 김0은 진정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조사참여관으로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인정되어 피진정인 경사 ○○을 주의조치하고, 경장 ○○○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07	27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2시간여 동안 조사를 강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수용
2008	28	구제조치 권고	간통혐의로 고소된 피해자가 임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한 후, 조사 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및 수사·유치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용
2008	29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승용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는 중 진정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수용
2008	30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에 대해 경찰장구를 과잉사용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교육할 것을 권고	수용
2008	31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도중 주먹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09	32	구제조치 권고	2일 간 심야에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어린 자녀(만 1, 3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경찰청장에게 원칙적으로 심야 감찰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 내용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수용
2009	33	구제조치 권고	소년 피의자 연행시 폭행, 보호자 통보없는 심야 조사, 조사시 위협행위에 대해서,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 경고 및 주의 조치 권고	일부수용
2010	34	고발	○○경찰서 고문 가해자들에 대하여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인권위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혐의개연성이 농후한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위법 제34조에 의거 검찰총장에게 수사요청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 권고	기타
2010	35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밤샘조사이 사건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 민간인에게 입건대상자명단을 건네준 행위에 대해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3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2010	36	구제조치 권고	1)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하고 피해자 스스로 피의자임을 주장하여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를 수배자로 의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향후 인신구속 등 수사 상 지문채취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72일간 구치소에서 구금되는 사건의 발단을 야기하여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임으로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자 하였으나, 2009. 11. 12. 진정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각각 피진정인 1)은 '견책', 피진정인2)는 '기각계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불문하고 2) 피진정인3),4)의 경우 검찰청으로 인치된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고 간과하여 피해자를 노역장 유치토록 집행지휘함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토록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검찰청장에게 피진정인3),4)에 대한 '주의'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	수용
2010	37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 초과상을 입힌 것은 인격권의 침해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에 대해 '계고' 조치할 것을 권고	수용

의결연도	연번	의결결과	권고내용	이행현황
2010	38	구제조치 권고	진정인에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범행현장을 검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인 형사와 강력 3팀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향후 이와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수사 업무담당직원들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0	39	수사의뢰	1.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 가혹행위 및 방조행위를 한 피진정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2. 경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 신체확인 및 CC-TV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	기타
2011	40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면서 총 3시간 20분 동안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지구대 및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시 수갑사용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1	41	수사의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기타
2012	42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수사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2	43	구제조치 권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4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호송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5	구제조치 권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수갑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수용
2013	46	구제조치 권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

표 -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행정조사 관련 주요 내용

- △ 출생지·직업·가족관계 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북한이탈동기·범죄경력 등 비보호결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및 질병치료·사회정착 교육 등 임시보호조치 기간은 법령상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표 - 15

난민신청자 대기실 생활 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생활 시설	남·녀 생활실(각 1) 및 침실(6개), 가족실(1개), 화장실(3개)
편의 시설	소파, TV(2대), 음료대(2), 잡지 가판대, 개인사물함(6개)

표 - 16

연도별 법무부-UNHCR 공동교육 실시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10.
횟수(참여인원, 명)	6(311)	9(256)	4(97)

표 - 17

난민위원회의 구성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6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6명과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판사, 변호사, 교수, 인권단체 관계자 등)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표 - 18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현황

(2020. 10. 31., 단위: 명)

총계	심사완료				심사 중			직권종료**
	소계	인정	인도적	불인정	소계	1차	이의신청	
550*	521	4	501	16	3	0	3	26

* 국내출생자 1명 포함

** 완전출국 등

표 - 19

가석방 관련 통계 ('17~'20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월
총 출소인원 (형기종료+가석방)	31,596	30,452	29,187	25,443
가석방 인원	8,275	8,693	8,174	7,294
가석방 출소율(%)	26.2%	28.5%	28.0%	28.7%

표 - 20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2017.5~2021.4)

연도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
2017년 5월	122.1
2018	113.3
2019	112.7
2020	111.0
2021	105.7

* 강원북부(교) 신설, 광주·청주·군산·경북3(교) 등 수용동 증축 사업, 서울·인천(구) 등 수용동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보

** 2021년 4월 현재 수용자 1인당 거실 면적은 3.34㎡이다. 앞으로 2022년 거창구치소가 완공될 예정이며, 경기북부(구), 화성여자(교) 신축 및 전주·원주·창원(교) 이전신축 사업, 청주·천안·목포·강릉(교) 등 수용동 증축·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수용공간을 확보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할 계획

표 - 21

교도관, 의료인력, 공중보건 의사 증원 인원 관련 통계

	교도관	의료인력*	공중보건 의사
2017	25	5	1
2018	108	13	4
2019	97	4	16
2020**	345	6	20
합계	575	28	41

*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포함

** 2020년 교도관 및 의료인력 1인당 수용자 수는 각각 3.3명과 157.1명이다.

표 - 22

징벌위원회의 위원 선발 규정

- ① 「형집행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3조에 따라 징벌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을 가진 자,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교정협의회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 ②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정 종교나 사상에 편향되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지닌 위원들로 징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 - 23

교정시설 사망자 및 사망원인별 현황 ('17~'19년)

연도	구분 합계	사망 원인							
		질병							자살
		소계	심혈관계	소화기	호흡기	간질환	암	기타	
2017	22	20	14		1	2	2	1	2
2018	40	33	22	1	2	1	1	6	7
2019	36	28	11		4	2	4	7	8

표 - 24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8장 사고보고 및 처리 중 제3절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8장 사고보고 및 처리 중 제3절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

제268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사고 관련자”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요원을 말한다.
3. “1차 지휘·감독자”란 사고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2차·3차 지휘·감독자”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 지휘·감독자를, 3차는 2차 지휘·감독자를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0조(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 ① 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 ②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표 - 25

군사법원의 재판 공개 관련 원칙

「군사법원법」 제67조 (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 26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1.30. 현재
신고/상담 접수건수	5,039	17,258	40,482	57,990	64,149	61,455	48,932	53,235

* 출처 : '20년 NDSTAT(국방부,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 자살관련 상담, 병영생활 고충, 군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고/상담을 접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기관이다. 국방헬프콜은 2008년 3월 군장병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의 '생명의 전화'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한 '육군생명의 전화'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전 군 확대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월 국군생명의 전화로 확대 운영하였고, 2013년 8월부터 각 군 군사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를 통합하고, 국가특수번호인 '1303'을 획득하여 국방헬프콜을 운영하였다. 국방헬프콜은 1년 365일 24시간 전화 및 사이버(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방헬프콜로 장병의 고충 및 범죄피해 등이 접수되면 사건을 판단하여, 지휘관에게 지휘조치토록 통보하거나, 수사(군사경찰) 및 조사(감찰)기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부대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 27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관한 조사결과('17. 9. 11.~ 9. 30.)

	구타		가혹행위	
	경험	목적	경험	목적
간 부	0.2%	1.8%	0.6%	2.5%
병 사	1.0%	1.5%	1.6%	2.7%

표 - 28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주요사업

- (조사·연구·자료서비스) 국내외 자료 수집, 번역서 출간,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등
- (교육·홍보) 웹진 운영, 학술 콜로키움 개최 등
- (대외협력) 영문콘텐츠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표 - 29

「위안부피해자법」 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관련 규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표 - 30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상 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표 - 31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에 따른 사업

- ① 일본군‘위안부’ 연구소 운영
- ② 전시사업
- ③ UNESCO 등재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8월 14일을 기림의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 행사를 진행

표 - 32

이주노동자 대상 법률구조서비스 관련

구분	대상	유·무료
법률상담	제한 없음	무료
소송대리	체불피해자, 선원, 국내거주외국인 등 공단이 정한 무료대상자의 경우	무료
	무료대상자 이외의 경우	유료

표 - 3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전국 17개소) 현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쉼터 운영기관	개소
경기	6
충북	1
경북	2
경남	1
울산	1
광주	1
전남	3
강원	1
제주	1
합계	17

표 - 34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③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표 - 35

‘군기교육제도’ 관련 법률 개정

- ① 이번 법률 개정으로 2020. 8. 5.부터는 영장 없이 구금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교정·교화를 위한 공동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2일의 기본교육과 인성함양, 체력단련 등을 각 군별 특성에 맞도록 구성한 최대 13일의 보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군기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기교육제도 운영으로 군기강 유지와 인권보장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여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함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리라 기대한다.
- ② 영창제도를 대체한 군기교육제도는 지정된 교육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1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일 교육시간은 상담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으로, 일반 병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그 외의 시간은 생활관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나, 복지시설의 이용 및 휴대전화의 사용은 제한된다.
- ③ 교육프로그램은 2일간의 기본교육과 나머지 교육기간 동안의 보충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군법교육,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보안교육 및 전문상담관에 의한 감정조절교육과 상담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는 인성교육 영상시청, 봉사활동, 환경정화, 소감문 또는 감사편지 작성, 체력단련 등 교육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 36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본 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보장 및 최소한의 침해를 위해 보호입원 대상과 입원요건 등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 ① 보호입원 대상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 필요성 또는 자·타해 위험성’에서 ‘입원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으로 개정하였고,
- ② 입원요건과 관련하여 입원 필요성 여부 판단에 대한 남용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비자의입원 신고 의무화 및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조사업 대면조사를 도입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동의입원을 신설하고, 자의입원 퇴원의사 확인 주기를 단축하였다.

표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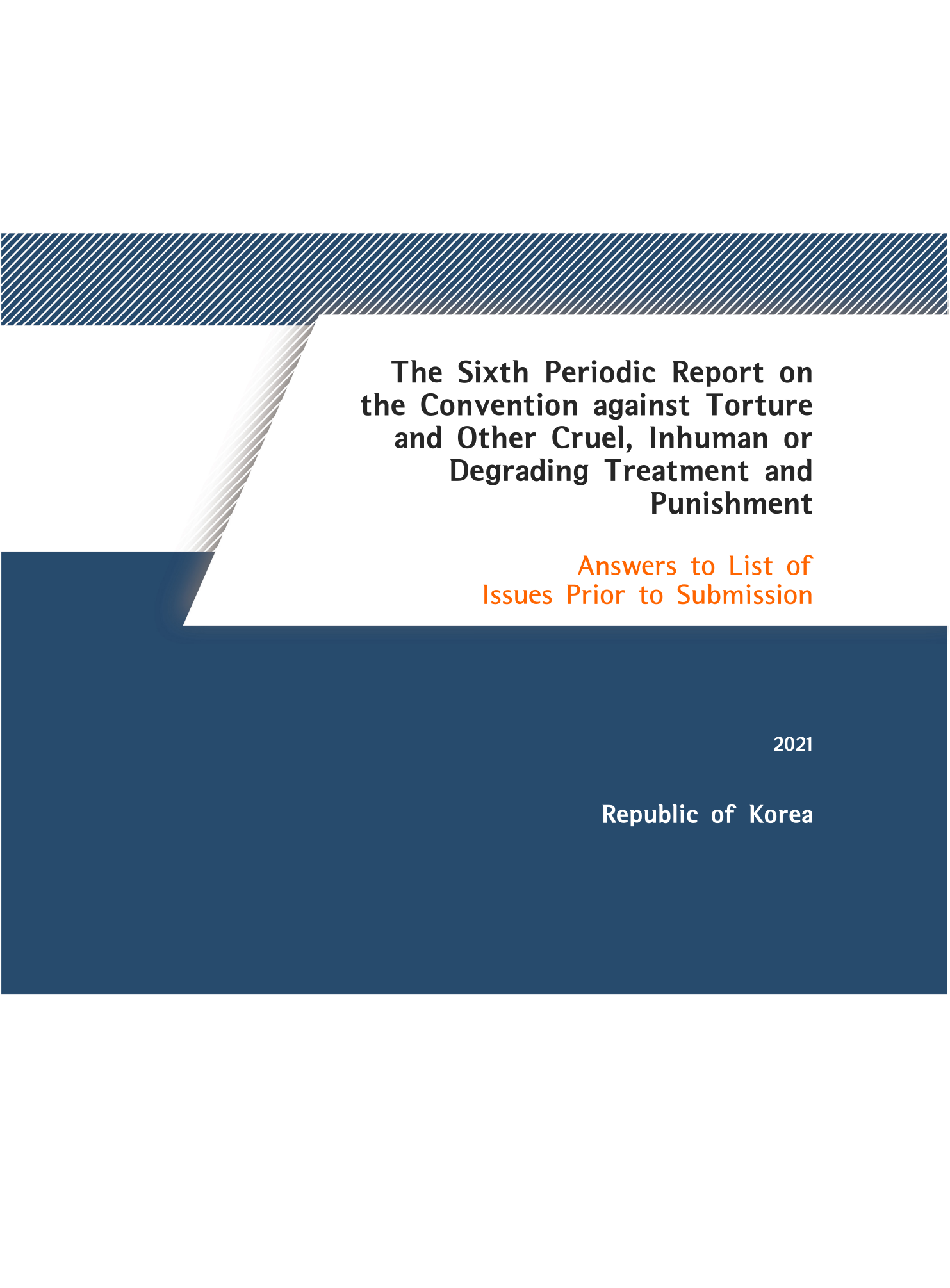
국가테러방지 활동 예시

우리 정부는 상기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대테러 조사·추적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테러단체에 각각 \$960과 \$2,000을 송금한 중앙아시아인 2명을 적발하였고,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0년 5월 징역 18개월, 2020년 9월 징역 12개월을 최종 선고하는 등 테러자금 지원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하였다.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당사국이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갇힌 사람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

교정본부	<p>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수용자와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를 지급하며, 가색방 확대 및 조절 이송 등 수용밀도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② 신입수용자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등 선제적 검사 실시 후 3주 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거쳐 음성인 자에 한하여 일반 거실에 수용하되 기저질환 등이 있는 확진자는 외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 치료 및 신속한 형·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경증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③ 또한, 교정본부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 운영 및 서신·전화통화 확대 실시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진자에게는 확진 상황과 향후 치료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의무관 진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확진 수용자에게는 감염 차단 방역활동 및 감염병 전문의에 의한 코로나19 예방 영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④ 더불어, 법무부 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을 상설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교정시설별 특성에 따른 개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⑤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수용자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
외국인 보호시설	<p>보호시설 근무자와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호외국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 노약자 등 취약한 보호외국인 대상으로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21. 1. 21.부터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호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각국이 항공기 운영을 축소하여 강제퇴거 집행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특히 최초로 송환전용특별기를 편성하는 등 보호외국인을 조기 송환하여 보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했다.</p>
소년 보호시설	<p>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소년보호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면회 및 수사접견 등은 방역을 위하여 폐쇄형 면회실에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일반면회를 중지하고 있으나, 화상면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수용소년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의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상시 진료하고, 외부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환자가 지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수용소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 방역 조치로 전 직원 및 신입소년·유증상 소년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지도하는 등 수용소년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까지 소년보호시설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p>

국군교도소	국방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1일 1회 수용동 방역, 군수용자 대상 전원 1일 2회 체온측정, 1일 1매 마스크를 지급, 외부인 시설출입을 제한적 승인, 수용동 식당 內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송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여 잠재적이거나 무증상의 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접근교통권 보장을 위해 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스마트접견' 제도를 가족과 지인에게 확대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소였던 스마트접견실을 2개소로 확대하여 수용자가 고르게 접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소홀해질 수 있는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화상접견 제도를 도입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미결수용자에게 접견환경을 보장하였다. 국군교도소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감염예방과 수용자의 기본권과 처우가 보장된 가운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입·퇴소는 입소자 본인 의사 원칙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코로나19 감염 발생('20. 1. 20.)에 따라 시설 내 입소자 및 종사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20년 1월~11월, 1~7판). 또한, 종사자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 시행하고, 유증상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내 방역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한시적 방역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내 요양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다. * 감염 예방 관리, 입소·출입 시 관리, 비접촉 면회 시행,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포함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연쇄적인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정신질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중증 또는 기저 질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송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를 늘리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하여 '21. 3. 5.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he Sixth Periodic Report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nswers to 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2021

Republic of Korea

-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Government"),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hereinafter the "Convention"), hereby submits the sixth periodic rep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This report include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evious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hereinafter the "Committee").

Articles 1 and 4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 of the list of issues (CAT/C/KOR/QPR/6)

- (a) Any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aimed at incorporating a definition of torture that goes beyond the current applicability
- 2 Article 125 of the *Criminal Act* (hereinafter the "CA") in place is a provision to punish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officials performing or assisting activitie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while all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hereinafter "**acts of cruelty**") may be punished by applying the "violence and cruelty act" provided therein order to realiz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Article 125 of the CA stipulates punishment for actsof violence or cruelty of police or those performing or assisting in activities concerning the judgment, prosecution,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gainst one such as a criminal suspect's or other persons'. "Violence" means the exercise of tangible force against the human body, and "acts of cruelty" means the overall actions of causing spiritual and physical pain, including torture or acts of cruelty in all forms. Accordingly, as torture and acts of cruelty in all forms may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A including Article 124 (Unlawful Arrest and Unlawful Confinement) an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ty Act) thereof, Article 9 (Crimes against Humanity)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the "**ICCA**"), Article 4-2 (Aggravated Punishment of Arrest, Confinement, etc.)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the "**SCA**"), the Government plans to carefully review the necessity of newly inserting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torture provided in the Convention.

(b) Whether it has been ensured that penalties for acts of torture are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crime

- 3 Since the last report (CAT/C/KOR/3-5), there has been no amendment to the CA with regard to torture and acts of cruelty. However, Article 125 of the CA stipulate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and Article 4-2 of the SCA regulates that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25 of the CA, resulting in the injury of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a year" with no upper limit. Accordingly, even acts of cruelty which do not cause injury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 in which the upper limit of statutory punishment is two times or more as heavy compared to the crime of general violence (Article 260 of the CA,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detention, or a minor fine)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gravity of the crime. When torture or acts of cruelty result in injury, Article 4-2 of the SCA is applied, where there is no upper limit in statutory punishment, while courts decide the specific extent of punishment given the gravity of individual crime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3 of the list of issues

Statute of limitations for acts of torture

- 4 In accordance to the ICCA,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applicable to the crimes of torture (Article 8(3), Article 9(2), Article 10(2) thereof, etc.) that are included as one type among the following: crime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etc. (hereinafter "**Genocide, etc.**") [crimes provided in Article 8 (Crime of Genocide) through Article 14 (War Crimes using Forbidden Weapons)] (Article 6 thereof). However, the non-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because such acts qualify as acts of torture, but this provision simp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Genocide, etc. provided in the ICCA, which are "acts with intent to fully or partially destroy a national, racial, ethnical or religious group," "an extensive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olicies of the State,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o commit such attack" or "act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us, the non-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crimes of torture provided in the ICCA is not sufficient on its own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other crimes of torture in all form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As the 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clearly not about the justification of torture but rather about the extent of recognition of the general excep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the "**CPA**"),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crimes of torture by specific typ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CPA to differentiate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also the diverse types, nature and statutory punishment of torture (e.g., violence provided in Article 125 of the CA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violence provided in Article 125 of the CA which resulted in bodily injury and death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and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respectively; and murder may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five yea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whether the indiscriminate non-applicability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regardless of the type is reasonable. As a bill including similar content as the Committee's Observations (Non-Applicability of Statute of Limitations to Tortur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Non-Applicability of Statute of Limitations, etc. to State Crime against Humanity* (bill): Non-applicability of statute of limitations to certain crimes including violence, illegal arrest, acts of cruelty, etc., by using governmental authority, submitted by Representative Choon-Suk Jung in July 2020)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ereinafter, the "NA"),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support the discussion on the legislation thereof.

Article 2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4 of the list of issues

(a) To be informed, both orally and in writing and in a language that they understand, of the charges against them and of their rights and how to exercise them

- 5 When detaining a foreigner for emergency reasons pursuant to Article 51(3) of the *Immigration Act*,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informs the foreigner either orally or by showing the announcement of their Miranda Rights, etc., (in writing, translated into seven languages) that he/she has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and that he/she may file an objection against detention. The foreigner is also informed that if he/she may request it, the official may provide written notice specifying the date, time and place of and grounds of detention to the foreigner's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family member or counsel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foreigner, or to the consul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ROK") who represents the country of which the foreigner is a national or citizen. After being detained, detained foreigners are provided with the procedures which are displayed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unit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o file a petitio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eith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the "NHRC") or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MOJ") and to make a request for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The contact information of embassies can be found in each immigration detention unit, allowing them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ir own country's consul at any time.
- 6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hereinafter the "CIA"), new inmates are notified orally or in writing of the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of inmates,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etc. In particular, under 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correctional officials with a good command of foreign languages are designated to conduct daily individual interviews, resolve grievances,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keep in contact with relevant institutions including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tes, and also to give assistance by providing unsentenced foreign inmates with legal knowledge necessary for procedures, etc.
- 7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inmates are investigated as having engaged in any behavior in violation of disciplinary rules to be complied with in correctional facilities provided in Article 107 of the CIA and Article 214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of, the overall procedures guaranteed are shown in <Table 1>.
- 8 The police, to fully understand the criminal rights of foreigners and ensure that they are able to exercise the rights, may provide interpretation into languages

that the inmates understand upon arrest and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91(1)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ule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the "**PIR**") and Article 217 of the *Crime Investigation Rules* (Ordinanc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ereinafter the "**KNPA**")) in particular, if necessary, the police have foreigners make and submit statements in their language to prevent disadvantages caused by language. Also,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2) of the PIR, in the case where foreigners are arrested or prosecuted, they are informed of the fact that they may have access to visits or communication with the consular service personnel of their country and may also request to inform the consul of their arrest or prosecution, and especially when Chinese or Russian citizens are under arrest or prosecution, it is required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with the two countries to inform the consul,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suspects. Such measures may be considered a very important institution, as it is effective to calm the psychological state of foreigners while also helping them to freely communicate with consular service personnel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fully exercise the right to defense not only upon arrest or investigation but throughout the entire criminal procedure.

- 9 Also, the police use a so-called "POLI-Phone" (a mobile phone equipped with various functions necessary for outside duty such as checking identity, vehicle plate number and whether a suspect is on the wanted list) when arresting a foreigner suspect, to inform them of the Miranda Rights in 16 languages including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Russian about 33 crimes including murder as a result, foreigners are informed of their charge(s) and rights in their native language upon arrest.
- 10 In addition, pursuant to Articles 7(4) and 7(5) of the *Rules on Detaining and Escorting Suspects* (Ordinance of the KNPA), when a foreigner is detained in a detention room, which is a police detention facility, for the first time,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 for Detainees" is translated and displayed, showing various rights in the detention center such as visits of a counsel, family members, relatives, etc., and that a petition may be filed to the NHRC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an introduction written in foreign languages with the method, process, reason, etc., of a medical checkup is placed in the medical checkup room. The Government also endeavor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to detention centers in 2018 the *Guidelines on Life in Detention Center for Foreigners* (i.e., possible questions to be receiv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while working at a detention center are prepared in eight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Chinese) that detainees' protection officers can refer to. In the case where interpretation service is needed unexpectedly at a detention center or site of arrest, it is recommended for police officers to actively use mobile interpreting services (tourist information call, BBB Korea, etc.) or a mobile interpretation app.

(b) Access to free legal aid and an independent lawyer

- 11 Rights to assistance of counsel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being guaranteed, in principle, in all investigation processes including b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 suspect is detained or not, provided that the rights are exceptionally inapplicable to cases in which the counsel unlawfully impedes the investigation, etc.
- 12 To further protect the rights of suspect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the "SPO") amended the *Operation Guidelines on Participation of a Counsel in Interrogation of a Suspect* (SPO's Guidelines) to newly insert a provision where a counsel may raise an objection to an unjust interrogation method during the interrogation, and established and enacted in May the *Guidelines on Visits and Communications with a Suspect*, etc., by a Consul to strictly guarantee the rights of a counsel to visit and communicate with an arrested suspect, etc., in the Prosecutors' Office. Furthermore, in October 2019, the SPO published the *Plan to Strengthen Counsel's Right to Audience*, mainly about expanding a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during an investigation, minimizing restrictions on a counsel's participation, fully granting a counsel the opportunity to directly make an oral statement to the prosecutor, expanding notification to the consul of the status of the case proceedings, etc. The SPO enacted the *Operation Guidelines on Participation of a Counsel, etc. in an Interrogation or an Investigation* (SPO's Established Rules) in November 2019. In January 2020, the *Rules on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Prosecutors' Office* (MOJ's Ordinance) was amended and enacted to strengthen a counsel's right to audience, thereby allowing counsels to take notes with no limitations during an interrogation or an investigation of a suspect, and specifically describing that inevitable grounds to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a counsel include the destruction of evidence, complicity, flight and damaging a material witness. As such, the investigators are making efforts to fully guarantee suspects' right to the assistance of counsel.
- 13 Especially for detainees,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s arrested or detained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the assistance of counsel, and Article 84 of the CIA regulates that a correctional official may not intervene in visits with a defense counsel and that the time and frequency of visits with a defense counsel shall be unlimited. Also, even sentenced inmates whose conviction is finalized are guaranteed the right to free visits with a counsel if they are tried for an additional criminal case.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to provide suspects whose attendance is required by an investigator with the assistance of a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 14 Under the CPA in effect, court-supported defense (pro bono legal aid) for a defendant, in principle, shall be recogniz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examination procedures of suspects before being arrested (Article 201-2 of the CPA) and the legality review procedures of arrest (Article 214-2 of the CPA), in cases where a suspect does

not appoint a defense counsel, the court shall appoint a court-supported defense counsel.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ion to newly insert counsel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to the CPA in 2007, the police has implemented the *Plan to Materializ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ion* since 7 March 2018, not to restrict the "justifiable participation" of a counsel. The content is shown in <Table 2>.

(c) Right to request and receive a medical examination by a qualified medical doctor within 24 hours of arrival in a place of detention

- 15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IA and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medical examinations of new inmates shall be conducted without delay (within three days), and inmates may receive medical treatment by a doctor (medical officer) working for the correctional facility any time upon request.
- 16 To improve inmates'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t an external medical institution, 47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operating a remote treatment system as of November 2020. On the details of medical examination, refer to <Table 3>.
- 17 Under Article 34 of the CPA and Article 31 of the *Rules on Detaining and Escorting Suspects* (Ordinance of the KNPA), in cases where detainees, their families, etc., make a reques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for reasons of disease, injury, etc., such requests are granted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Als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for Detainees* displayed in detention centers explains that detainees may request medical treatment to a doctor, ensuring that they may request and receive such treatment any time. Detainees who want to take medicine are allowed to do so only when the safety of the medicine is verified by its prescription, a hospital and a pharmacy. The Government endeavors to protect detainees' right to health by operating the *Medical Support Project* to support hospital and operation charges and outpatients' medical costs for those who satisfy specified conditions among the homeless, foreign workers, refugees, etc., who are not eligible to receive medical benefit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ROK and the Payment System for Unpaid Emergency Medical Costs which is applied when a detainee who needs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annot afford the costs. The medical institution first pays for the emergency treatment and is paid by the detainee later after the review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ccess to an independent doctor upon request

- 18 Detainees may receive medical treatment by a doctor (medical officer) working for the correctional facility any time they request, and may receive treatment by an external doctor in consideration of the opinion of the medical officer pursuant to Articles 37 and 38 of the CIA and Article 55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 **Whether doctors can bring medical reports of injuries suspected to be caused by torture directly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 19 Even though a medical report constituting an individual's sensitive information is, in principle, confidential information, when the requirements Article 218 of the CPA are fulfilled, the doctor (medical officer) may submit it by his/her own discretion to the prosecutor after getting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facility under Article 21(3) of the *Medical Service Act* (hereinafter the "MSA").

(d) Right to notification of detainees' detention immediately after apprehension

- 20 When a suspect is arrested, the title of the alleged case, the time and place of apprehension, the summary of the crime, the reason for apprehension and the fact that one may appoint a counsel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to a counsel or any other person designated by the suspect without delay, and such right to notify a family member or any other person of an arrested suspec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2(5) of the Constitution, Article 200-6, Article 201-2(10), Article 209, Article 213-2 and Article 87 of the CPA.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4-2(2) of the CPA, it shall be notified that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arrest may be requested to a person designated by the suspect among those who may reques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arrest such as the arrested suspect or counsel.
- 21 Article 33(1) through (3) of the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ors and the Judicial Police and the General Investigation Rules*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57 of PIR stipulate that the title of an alleged case, the time and place of apprehension, the summary of the crime, the reason for apprehension and the fact that one may appoint a counsel shall be notified within 24 hours in writing to a counsel when possible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suspect among those specified for in Article 30(2) of the CPA when not,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defense of the suspect.

(e) Right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within 48 hours of apprehension

- 22 Apprehension and arrest are distinguished under the system of the ROK, and a suspect shall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the investigator files a request for 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when the request is filed, which is guaranteed under the detention warrant system, the legality review of the arrest, etc., including the review of the detention warrant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PA. Investigators shall release a suspect immediately if a request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is not made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pursuant to Article 200-2(5) of the CPA, and shall also release a suspect immediately if a warrant of detention is not issued because the request for a warrant of detention of the suspect arrested based on a warrant of arrest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200-4(2) thereof. In the legality review of arrest and detention guaranteed under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14-2 of the CPA, the court shall examine the suspect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n which the request is fil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view of the detention warrant provided in Article 201-2 of the CPA, a judge who receives a request for a warrant of detention shall examine the suspect without delay.

Right to have their detention, including transfers, recorded immediately after arrest

- 23 In cases where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is deprived of freedom by arrest based on a warrant of arrest, emergency arrest,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enforcement of a warrant of detention, etc., the facts of such detention including the date, time and place of arrest, place of detention, transfers, etc., shall be recorded upon arrest under the regulations regarding investigation provided in the *Rules on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Prosecutors' Office* (No. 980 of MOJ's Ordinance).
- 24 When a person is detained and transferred to a correctional facility, the information about the transfer is recorded and entered in the detention record report and the correctional information system (Borami System), respectively, and transfers between correctional facilities are also recorded and entered therein.
- 25 When arresting a suspect, the police shall record the matters relating to the date, time and place of arrest and detention, the rank, position, name, etc., of the police officer who arrested the suspect in the forms of a flagrant offender arrest report and an emergency arrest report set in the PIR. Also, in cases of arrest based on a warrant of arrest, such matters shall be recorded in the warrant of arrest, and the same goes for warrants of detention. In addition, such matters, which shall be recorded in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hereinafter the "**KICS**"), are also being recorded and managed digitally. As such, the police are recording and managing all matters related to arrest and detention. With the release report for all types of arrest provided in the PIR, matters regarding release are also being recorded.
- 26 As for detention in a police detention center, a suspect is accommodated based on the form of detention instructions set in the *Rules on Detaining and Escorting Suspects* (Ordinance of the KNPA), and all information about detention is recorded to prevent any cause of or contribu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suspects. For example, the date and time of detention (and of release) are recorded in the form of detention instruction; police officers working at detention centers shall enter information about detention such as the date and time of detention in the KICS and such information shall be confirmed and reviewed by detainee protection officers (i.e., by investigation directors on weekdays and police situation management directors after working hours and on weekends).

— Right to have access to the KICS

- 27 Suspects may make an inquiry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ir own criminal case through the KICS (whether the case is s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to whom the case is allocated, whether the case is prosecuted, etc.), and if they designate their attorney (legal counsel, family members, etc.) therein (entering information such as investigation agency, case number, name of the attorney,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and legal counsel registration number), the attorney also may make an inquiry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case. However, as information about the progress of the criminal case provided as above does not include any specified information about detention, such information may not be found in the KICS, provided that the fact that a suspect is detained, the place of detention, etc., are notified to the suspect's family members or his/her legal counsel upon arrest and detention, apart from the inquiries listed above.

(f)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 with the assistance of a lawyer

- 28 Suspects'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 is represented by the legality review of arrest and detention, stipulated in 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14-2 of the CPA. The arrested or detained suspect or his/her defense counsel,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family member, cohabitant or employer may request the legality review of arrest or detention to the competent court, while the police officer who arrested or detained the suspect shall notify the suspect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suspect among those listed above of the fact that they may request the legality review. Also, the court which received the request shall interrogate the suspect and investigate the evidence, etc., within 48 hours from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then, in cases where the court recognizes that the request is with merit, shall order to release the arrested or detained suspect. The legal counsel may make a statement about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of the suspect by attending the interrogation procedure, ensuring suspects to exercise such rights with the assistance of a legal counsel.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5 of the list of issues

- 29 The prosecutors of the ROK deemed the death of Mr. Baek owing to a skull fracture resulting from a direct hit by a high-pressure police water cannon during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General People's Uprising" dated 14 November 2015 (hereinafter the "**Death of Mr. Baek**") to be the abuse of public authority causing grave damage, which is death, to the public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of a water cannon (prohibition on direct hit against the chest), which is a dangerous piece of equipment, and the negligence of related instruction and

monitoring, and prosecuted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hereinafter the "SMPA"), the former Commander of the Fourth Mobile Corps of the SMPA and two officials assigned to control water cannons for death resulting from occupational negligence on 17 October 2017. The second instance court convicted all defendants including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MPA (with a fine of KRW 7–10 million) on 9 August 2019 and especially acknowledged the negligence that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MPA, the general manager, had recognized the excessive watering but not taken necessary actions. The former Commissioner of the SMPA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on 13 August 2019 which is under progress, and the court finalized the guilty rulings for the other defendants.

- 30 In the "intensive training" period lasting 4–10 weeks respectively designated in the first and second halves, all police units are provided with stepwise training courses including (i) human rights and safety training and (ii) on-site response simulation training based on the law and principle. (For relevant statistics, see <Table 4>.)
- 31 On 25 August 2017, the police of the ROK launched the Fact-Finding Commis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KNPA, more than two thirds of which consists of external experts. The Commission investigated the police's management policy over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situation of the victim being watered and injured, appropriateness of follow-up measures taken, etc., in relation to the Death of Mr. Baek for six months, from 1 February to 20 August 2018. The commission announce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which was that the riot police assigned to control water cannons were lacking in safety inspection and training as of the day when Mr. Baek died on 20 August 2018. The commission considered the use of water cannon against Mr. Baek even when a risk did not obviously exist and the act of ordering use without supervision to violate the victim's personal liberty, and made eight recommendations to the police including an apology to his bereaved family members (see <Table 5>), seven of which were implemented. However, with regard to the matters required to amend the law, the relevant law was proposed and has been discussed in the NA. As for the withdrawal of the litigation filed by the State among the recommendations above, neither party chose to raise an objection to the recommendation for compromise by the court's ruling against the litigation, resulting in the case closed.

The lawsuit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that the bereaved family of Mr. Baek raised against the ROK was closed, as the court ruled the recommendation for compromise on 22 January 2018, and the Government accepted the court's ruling of the recommendation for compromise and paid KRW 490 million (approximately USD 410,000) including the consolation money thereto.

The former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NPA made apologies to Mr. Baek and his bereaved family at the launching ceremony of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16 June 2017, saying "our deepest condolences and apologies to Mr. Baek

and his bereaved family." Later, the police offered apologies again at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eath of Mr. Baek on 25 September 2017 and after the prosecutors announced the investigation result of the Death of Mr. Baek on 17 October 2017. On 26 July, the last day of the fact-finding commis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KNPA, the police apologized to the victims in relation to the Death of Mr. Baek as well as th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committed by the police.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6 of the list of issues

(a) Any complaints and investigations on the excessive use of force against the bereaved families of victim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during the one-year memorial assembly

- 32 The NHRC, in the name of the Chairperson thereof, requested to the Government fact-finding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regarding the Sewol Ferry accident in August 2014 and re-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gain including the amendment to the act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at the one-year anniversary in April 2015. Also, to monitor the police's excessive use of force, the NHRC dispatched human rights guardians to the scenes of relevant demonstrations and rallies including the one-year memorial assembly.

— Outcome of the proceedings and on any redress awarded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s

- 33 The bereaved family members of 121 out of a total of 299 victim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rejected compensation under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ssistance Therefor; etc.* and they directly raised a lawsuit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valued at KRW 107.8 billion) between September 2015 and April 2017. The first instance court ruled the partial defeat of the State (valued at approximately KRW 72.4 billion) on 19 July 2018. On the further details of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s and its redress, refer to <Table 6>.

(b)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and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 34 The KNPA prepared the mid-term framework plan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1st 2018–2020), developed training content including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s, materials and video materials for police officers, established the Police Code of Conduct of Human Rights Directives (hereinafter the "PCC") (see <Table 7>) and strengthened training about the prohibition on torture and compliance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specially Article 4 of the PCC stipulates

that police officers shall not conduct nor accept physically and mentally inhumane and cruel acts including torture while on duty," and the police have prepared and distributed the interpretive guide to the PCC and provided police officers with training abou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orture. In February 2021, the police produced an instructive video in the form of interpretation thereof and conversation with the incumbent police officers and made workplace training mandatory for all police officers across the nation, improving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torture. The KNPA has required all police officers to take human rights training for six hours a year. The training includes the detailed guidelines on activities protecting human rights for police officers on duty.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training, on-site police officers have easier access to human rights training in their everyday life with regular training content. For example, by producing and distributing human rights pocket books, on-site police officers may become aware of what needs to be paid attention to in relation to their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torture, etc.

(c) Information on whether the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have been reviewed, and whether more rigorous safety inspections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death of Mr. Baek

- 35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the police amended the *Rules on the Standard of the Use of Hazardous Police Equipment* in January 2020 that the police no longer use water cannons at the scenes of rallies or demonstrations the requirements for the use of water cannons are strictly specified that they may be placed and used only when an emergency risk such as an uprising or a direct attack against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occurs following the order of the Commissioner of local police agencies; and the standards of water pressure by distance are stricter. Also, in March 2019,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articipants and the public, the police launched the "Demonstration Scene Safety Diagnosis Team" (see <Table 8>). 9 Also, when conflicts between participants occur or are obviously expected to occur at a scene of a collective complaint, the police take necessary measures to control and prevent such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and 6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7 of the list of issues

- 36 During the review period, the *National Security Act* (hereinafter the "NSA") was not repealed nor amended. Article 1(2) of the NSA regulates the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such as prohibition on extensive construction, and the said Act includes the requirement of "with the knowledge of fact that

it may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ROK have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ity and necessity of Article 7 of the NSA, and the said Act shall be strictly applied only to the cases where "there exists obvious danger that will cause practical harm on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based on the courts' established precedents.

- 37 The Government protects the freedoms of speech, assembly and press to the maximum and prevents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by restrictively applying the NSA only to cases where "there exists obvious danger that will cause practical harm on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fundamental order" based on such Act and precedents. (For statistics on the prosecution in violation of NSA, see <Table 9>.)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8 of the list of issues

- 38 The NHRC, a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ay receive complaints from detainees, conduct visit investigation *ex officio* on detention facilities including military detention centers and foreigner detention centers and interview detainees in the absence of witnesses during complaint investigation. Also, it may recommend policy improvements or correction to government agencies, etc., based on the result thereof.
- 39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has launched and operated the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 Center. The Bureau receives complaints about torture and ill-treatment which occur in various detention centers under the control of the MOJ and conducts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with no instruction from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etc. The Human Rights Bureau ensures persons detained in various detention facilities under control of the MOJ to be able to quickly and easily submit a complaint (see the details of operation in <Table 10>). When the oc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recognized, it may take relief measures such as request for investigation or penalty on the person who violated human rights and the manager thereof, request for improvement measures, notification of state compensation or legal aid and recommend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 40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when it needs to confirm medical evidence (medical record, diagnosis, opinion, etc.) of a petitioner or a victim (hereinafter the "**petitioner**") during the proceeding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may receive it by requesting to the detention center in which the petitioner is detained to submit materials pursuant to the *Rules on th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Detention Centers* or requesting the detention center or the medical institution to submit medical records, etc., by attaching the agreement of the petitioner pursuant to the MSA.

The status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with regard to torture or acts of cruelty which are crimes under the CA and the SCA between 2015 and 2019 is shown in <Table 11>.

- 41 The status of receipt and proceeding of complaints by the NHRC in connection with torture and acts of cruelty between 2016 and October 2020 is shown in
- 42 <Table 12>. "Torture and acts of cruelty" in the said status include excessive use of equipment and unlawful arrest therefore, it is noted that the definition of "torture or acts of cruelty" provided in paragraph 41 above is different therefrom.
- 43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in the Armed Forces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stipulates that the human rights of military inmates shall be respected to the maximum in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in the armed for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in Chapter XII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a military inmate may apply for a talk with the warden regarding the treatment; and pursuant to Article 102, one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a public official on an inspection round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the one has received. To be specific,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Ordinance of Military Human Rights Affair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reinafter the "MND") No. 2334), inmates of military detention centers may file a complaint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mong the complaints submitted by inmates of military detention centers, one complaint was proceeded in 2018, seven in 2019 and seven in 2020. No complaint was related to torture or cruel, inhumane or humiliating treatment, and most of the complaints above were about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9 of the list of issues

- 44 The Government amend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hereinafter the "NHRCA") on 3 February 2016 to secure the diversity of the members of the NHRC and transparency of the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thereof. To set up a transparent process fo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its members, diverse social groups may recommend a candidate and provide an opinion thereabout, and human rights advocates may be selected or appointed as their career is also recognized. Also, a provision to exempt any responsibility of the members for their remarks mad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is insert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NHRC.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the NHRC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bordinate decree of the NHRCA, with utmost consideration given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NHRC and to enable it to perform its duties effectively.
- 45 Refer to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NHRC in paragraph 38. Such authority

of the NHRC is guaranteed by the law. The NHRC made recommendations for remedies and penalties and request for investigation to, and laid an accusation against the Prosecutors'Office and the KNPA for 46 complaints in total with relation to torture. Among 38 cases for which relief measures or penalties were recommended, 34 cases were accepted except for two partially accepted cases and another two rejected cases, and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torture, individual measures for respondents, vocational training about investigation and the use of equipment, human rights training, investigation about torture, etc.,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details of individual recommendations, see <Table 13>.).

- 46 The authority given to the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b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s likely to conflict with relevant domestic acts such as protection of military secrets, prohibition of leaking of secrets relating to duties, etc.,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mmediately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In the meantime, the NHRC i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Paris Principles*, serving the roles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Prevention Mechanisms provided in the Optional Protocol as explained in paragraph 38. Accordingly, as domestic detention centers in the ROK are under monitoring about torture and acts of cruelty by an independent institution as intended 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we humbly ask the Committee to faithfully review this matter again.
- 47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3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8–2022, hereinafter the "**NAP**") in August 2018. The 3rd NAP, drafted through two public hearings and 18 meeting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civil societies and ministries, contains policy tasks to impleme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Major tasks include the review o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mprovement in the 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law enforcement at the scene of rallies, guarantee of peaceful demonstr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non-application of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and revision to the laws on anti-discrimination. Including the recommendations by the treaty bodies including the Committee as appendices, the 3rd NAP may be referred when public officials execute policies.

Article 3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0 of the list of issues

(a) Whether persons escap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 still be detained for up to six months after their escape; whether in practice persons can be detained for indefinite periods; and the legal maximum time period for the detention of such persons

- 48 The investigation on the persons escap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rried out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the "NIS") is just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to protect and support them grounded on Article 7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hereinafter the "NKA"), which is not intended to punish them, and the Government notes that the temporary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may not be deemed as forceful detention as it may be commenced and terminated based on the free will of those who applied therefor. In addition, the Government amend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KA in February 2018, to shorten the temporary protection perio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at had been within 180 days from their arrival to "within 90 days from their arrival, in principle." The NGO report submitted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June 2019 describes that "the upper limit of the investigation period has been shortened to three months due to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but as there is still no limitation in the determination period with regard to protection, they may be detained for indefinite periods," which is not true. After the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t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Center of the NIS, North Korean defectors leave the center and jo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naw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whether a North Korean defector shall be protected or not, not the NIS, and such determination is made while they live 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Accordingly,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North Korean defectors join the Settlement Support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even before the determination of protection is made,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NIS to temporarily protect North Korean defectors for indefinite periods for the reason that such temporary protection is needed in determination of protection even after the end of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 49 In addition, pursuant to the internal guidelines of the NIS established under the mandate of the said Enforcement Decree, North Korean defectors may contact their family members outside via phone calls or visits during the temporary protection period. In fact, the temporary protection period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average is approximately 60 days from their arrival.

— **The number of such cases during the reporting period**

50

The investigation and temporary protection period of North Korean defectors shall be, in principle, up to 90 days under the said Enforcement Decree amended in February 2018, and the period is around 60 days on average. Therefore, there has been no North Korean defector whom the NIS investigated or temporarily protected for six months from May 2017 to date.

(b) Whethe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fforded fundamental legal safeguards during interrogation and detention

51 The NIS invites an external attorney-at-law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sufficiently given legal assistance during a temporary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process, to monitor whether there has been human rights violation that may occur during such process and to ensure North Korean defectors who need legal assistance to get one-on-one counseling therewith. Especially in July 2019, tasks, qualifications, terms, independent status, etc.,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hat had been determined based on internal guidelines of the NIS have been included in the said Enforcement Decree to reinforce legal grounds on 16 July 2019.

52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are appointed pursuant to the standards stipulated in Article 12-5 of the said Enforcement Decree. The qualifications include attorneys-at-law with 10 years or more of practical experience and those engaged in activities related to human rights or North Korean defectors for 10 years or more.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appointment process, outside institutions with public confidence such as the Korean Bar Association are requested to recommend a candidate. Currently, an outside female attorney-at-law is appointed as a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and currently performing her job in an independent status.

— **Whether the methods and duration of interrogation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53

The NIS has conducted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will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pursuant to the NK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as shown in <Table 14 >.

(c) Whether precautions were taken in relation to the deportation on 7 November 2019 of two fisherme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State party's obligations under Article 3 of the Convention

- 54 The Government deported two fishermen who killed 16 colleagues on board and fled to the southern area of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n the East Sea to North Korea on 7 November 2019. This was the first case to deport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deemed that the will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who committed a heinous crime, to defect to South Korea was without sincerity. The Government carefully reviewed and referenced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Convention abov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deportation. The deportation was determined with utmost priority given to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ublic, a State's fundamental duty, amidst the circumstanc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d) Efforts to revise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 55 When formulating the grounds provided in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overseas refugee/asylum legislative provisions, including those of Australia and Germany as well as the *EU Asylum Procedures Directive*, were referred to specify the standards of non-referral decisions on asylum claims, and those grounds are under review for a possible amendment. In the meantime, a bill to amend the refugee legislation, remov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1) of the Decree*,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18 June 2015, but was discarded as the term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ended as of 29 May 2016.

Improved reception conditions for asylum seekers at POE

- 56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introduced a waiting zone with amenities and other facilities i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ee <Table 15>) to provide better reception conditions for asylum seekers at the Port of Entry (POE).

Enhanced quality of RSD decisions at first instance

- 57 To boost the quality of first instanc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hereinafter "RSD") decisions, the MOJ has conducted 50 hours (or more) of mandatory training per year per person, along with the joint training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the UNHCR since 2018, to its employees responsible for refugee affairs (see <Table 16>). To ensure the accuracy of interpretation during the RSD procedure, the evaluation of interpretation performance on Refugee Interpreters has been carried out by outside professionals such as interpreters and experts on specific regions/countries or languages since 2020.

- 58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sylum appellate body**
- In February 2020, a division dedicated to fact investigation on objections raised with regard to a decision of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etc. (i.e., the Refugee Appeal Division) was established, separated from the division operating the first-instance refugee screening system,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peration of an independent asylum appellate body. In April 2020, persons from the private sector were commissioned as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sub-committee deliberating agenda to be submitted to the Refugee Committee, an objection deliberation body (see <Table 17> for details).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Refugee Committee" comprising 35 external experts in refugee-related fields was established in July 2020 to expand external advice about the deliberation of objection filed, improving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deliberation.
- 59 **Current status of the 500 arrivals of Yemeni asylum seekers on Jeju Island**
- The status of Yemenis claiming asylum in Jeju Island is shown in <Table 18>.

Article 10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1 of the list of issues

- (a) **Training on the Convention for public officials**
- 60 To establish a culture which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persons related to the cases during investigation, internal and external professional instructors are invited to the fundamental training courses by grade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by sector for prosecutors and prosecution investigators, which provides training about import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Investigation Rul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etc., examples applied to practice, human rights violation inspection cases, etc. The aforementioned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 that acts of cruelty including tortur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related to the cases such as suspects shall be prohibited in any circumstances, while regulating fair investigation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To be specific, the aforementioned laws and regulations strictly restrict investigation conducted for a prolonged time or at night, while ensuring human rights-based investigation by prohibiting the unfair use of separate investigations for the relevant case and prolongation of investigation to find a new criminal charge not related to the relevant case. In addition, the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before indict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only when there

exists a false report in practice, such information may be exceptionally disclosed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stigmatizing persons related to cases as criminals before the court's trial. Also, humiliating investigation or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are prevented by restricting open summons or installation of photo lines. The Institute of Justice provides newly appointed prosecutors with an opportunity to recogn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may occur during investigation by conducting "role playing investigation practice" with which they can experience the situation of people under investigation. Officials who control inmates at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those in charge of protection and correction are also given various training about how to use protection equipment and awareness raising on inmates with mental illness and sexual minority inmates,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nmates. Training about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s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fundamental courses for each occupational group of judicial and prosecution officials, and the number of those provided with the training is a total of 16,662 from 2017 to 2020.

(b) On training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other public officials of the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61 All medical professionals provided in Article 2 of the MSA shall take refresher training implemented by each central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thereof (except for those subject to postponement or exemption provided in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Rules* thereof such as those who newly obtained the license), and such refresher training is implemen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ervices by having medical professionals obtain medical techniques in a timely manner, information about medicine, etc.,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their capability. The *Enforcement Rules* thereof were amended (enacted on 1 January 2018) to make mandatory taking two hours or more of the course on medical ethic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edicine to enhance professionalism and occupational ethics. Currently, the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not included in the mandatory refresher training course, but, if necessary, decision on whether to include it therein shall follow the review on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amended intention of refresher training for medical professionals.
- 62 Each correctional facility under the MOJ frequently provides all officials including medical officials with training to improve awareness of human rights such as prohibition on torture and acts of cruelty it also operates training courses for new medical officials (approximately 10 officials) and public health doctors (approximately 30 doctors) every year about gender communication, medical policy for inmates, roles of medical officials, correctional legisl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treatment to protect inmates' right to health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friendly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 Any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provided to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its impact on the reduction of the incidence of torture

- 63 After the judicial and prosecution officials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the trainees answer a survey about the training courses and lectures. The survey items include internal elements such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aining period, content and composition of subjects, as well as operational ones such as the capability of instructors and sufficient support by the relevant officials and environmental ones including training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meal service, to seek comprehensive assessment across the course. With the survey, the Institute of Justice trie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ma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and provide substantial training by complementing weak points for the courses to follow. Also, by administering surveys to those who completed the training and returned to their institutions, as well as to their colleagues and superiors, the Institute of Justice endeavor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training course by identifying how much the training improved the trainees' practical capability and collecting opinions on further improvement.

Article 11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2 of the list of issues

- 64 The MOJ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measures to expand parole such as the alleviation of application standards for the parol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introduction of parole screening for short-term inmates (see <Table 19>). The MOJ has progressed stepwise projects to expand reception places by newly constructing or moving correctional facilities, remodeling unused spaces and extending reception buildings to reduce overcrowding and expand rooms allotted to inmates. Refer to <Table 20> on the ratio of inmates to capacity.
- 65 To improve the material conditio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MOJ has continuously improved facilities and living environments by installing LED lights and upgrading the heating system and toilet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across the nation. With regard to Rule 18(Personal Hygiene) and Rule 19 (Clothing and Bedding), it promotes hygiene improv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y installing washing machines for common use, providing t-shirts, distributing personal food trays, etc. The MOJ will continuously put in efforts to reflect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its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change in

correctional environments, etc. Inmates stay healthy with daily exercise of within one hour a day, and the MOJ supports thereintegration of inmates to be a member of society by minimizing a sense of alienation that they may feel as being in the institutions with social treatment measures by providing field trips andrecovery programsfor family relations. Such social treatment will continuously be expanded.

- 66 A total of 575 prison guards were hired during the period under review. The MOJ tries to secure medical personnel by improving working environments such as by introducing advanced medical equipment and upward adjustment of grades and wages of medical officials. Refer to <Table 21>. External specialized medical care, such as referrals to outside medical clinics, visiting treatments and remote video treatments,is on an increase as the correction authority has actively made efforts, and especially remote video treatment has increased to 24,088 cases in 2020 from 14,377 in 2017 with remote medical systems established in 47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31 affiliated hospitals in November 2020. The referrals to external medical clinics have decreased to 37,101 cases with the decrease in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due to COVID-19 in 2020, but in an increasing trend from 37,403 in 2017 to 39,824 in 2019.
- 67 To ensure that protective devices and restraints ar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rticles 97 through 99 of the CIA strictly regulate requirements for use thereof, prohibition of abuse, etc. When using protective devices or compelling force, officials shall use a video device such as a camcorder and a body cam, in principle, and the evidential materials shall be conserved for 90 days or more. To monitor whether such regulations are complied with, institutional safeguard has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of the *Enforcement Rules* on the aforementioned Actfor example, whether protective devices are continuously used shall be screened and recorded four times or more per day, and movements per hour shall be observed and recorded.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3 of the list of issues

- 68 Solitary confinement shall be imposed for up to 30 days based on the resolution on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made by the DisciplinaryCommittee, and the MOJ is looking for measures to reduce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solitary confinement during punishment to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Article 112(4) and (5) of the CIA was amended on 4 February 2020to ensure that even inmates subject to suspension of doing outdoor exercise may do it at least once a week.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6) of the CIA and Article 133(4)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inmates subject to solitary confinement are receiving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for example, a medical officer shall frequently check the health of the inmate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xecution of solitary confin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1(6) of the

CIA, the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s shall be given a sufficient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by attending the committee, may state any facts favorable to them in writing or orally or file evidence and may file an objection such as an 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 69 With regard to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CIA, such committee shall be operated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o determine disciplinary action on the persons subject thereto the person on the second rank after the warden shall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five to seven members, the warden shall appoint at least three members among the directors of the competent agencies and external personnel, who have muc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rrection. Any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hallenge to any member; the warden who requested the resolution of disciplinary action and the member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may not attend the committee; where members are the relatives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or where there is any special ground to believe that impartiality from them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is hardly expected, no such member may attend the committee; and only when at least one outside member makes attendance, the committee may be held to promot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addition, as external members shall be construed as public officials, punishment is aggravated for unlawful acts such as bribery or divulgence of classified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ir task. In the meantime, the right to the defense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is protected as they may make a sufficient statement by attending the committee and may state any facts favorable to them in writing or orally or file evidence. See <Table 22> for the regulations for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4 of the list of issues

- 70 The Government has consecutively accepted pretrial inmates in substitute cells in connection with the building of new correctional facilities. As of April 2021, all substitute cells are closed with the inmates in the remaining four police stations accepted. To reduce overcrowding, the Northern Gangwon Prison was opened in Sokcho in 2020, and the Government has sought the building of five correctional facilities in Hwaseong, Taebaek, Northern Gyeonggi, etc., as well as movement and reconstruction (eight institutions) and extension and remodeling (six) of the existing facilities. Refer to the number of guards in paragraph 66.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ccepted the pretrial inmates in four remaining substitute cells in August 2020; male and female inmates are separately accepted; and female guards supervise the medical checkup, counseling, training, work, etc., of female inmate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5 of the list of issues

(a) The number of deaths in custody

71 The number of deaths in custody and the status of causes are shown in <Table 23>.

— The age and sex of the victim and the outcome of the inquiries, and any redress provided to families

72 Among deaths in custody, five persons were between 19 and 39 years of age, 54 were between 40 and 59 years of age, and 39 were 60 or older. Among them, two were women while 96 were men. With regard to such deaths, the outcome of the inquiries are reported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prosecutors, and then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closed. Between 2017 and 2019, a total of 13 suits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ere filed by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dead in custody, and nine were closed and four are under proceedings. In two out of the nine closed suits,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was recognized and paid.

— The provision of adequate medical treatment to persons suffering from diseases and those requiring specialized medical care

73 To expand the right to access external medical treatment of inmates, the Government has provided ex medical clinics, visiting treatments and remote video treatment, and especially remote video treatment has been operated in 47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2020 (and it is planned to expand the service into all correctional facilities in 2021). Refer to the medical checkup for inmates in paragraph 15.

— Specific measures taken to prevent deaths in custody, including suicides

74 The Government endeavors to prevent deaths in custody including suicides by implementing various medical treatment such as treatment by medical offic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external medical clinics, visiting treatments, remote video treatments, regular medical checkup at external institutions for all inmates and operation of hemodialysis rooms and remote clinics. Bo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provide face-to-face counseling, life line and video counseling to find inmates likely to commit suicide in the early stage and help them become psychologically stable, and it is planned to continuously find inmates in a high-risk group for suicide by providing training titled "life guards to prevent suicide" for inmates in the future.

(b) Investigation on deaths in custody

- 75 When a death in custody occur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promptly takes relevant procedures such as an autopsy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prosecutors. When such death is related with the violation of duty of a guard, the superior supervisory institution, the local correctional agency, conducts on-site investigation about the circumstance of the death, whether they performed their duty appropriately, etc.

— Whether person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cts of torture, physical or psychological ill-treatment or willful negligence are prosecuted

- 76 Public officials who committed torture or acts of cruelty shall be punished by Articles 124 and 125 of the CA and Article 4-2 of the SCA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provided for in Article 124 or 125 of the CA, resulting in the injury or death of any person).

— Whether the persons ar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gravity of their acts, if found guilty

- 77 There has been no case at the point of submission of this report, where a person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cts of torture, physical or psychological ill-treatment or willful negligence is prosecuted in connection with a death in custody to the point this report was submitted, but the prosecutors of the ROK impos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gravity of acts if such a case occurs.

(c) Whether independent forensic examinations are carried out in relation to all deaths in custody

- 78 When a death in custody occur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takes relevant procedures such as an autopsy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prosecutors. As for the 98 death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occurred for the last three years, the officers conducted autopsies in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bereaved family agreed thereon and the doctor's opinion that an autopsy is needed, under the instruction of the prosecutors, and as a result, thoroughly resolved any suspicion about the cause of the deaths.

— Whether family members receive autopsy reports

- 79 The CPA regulates that, when a person is suspected of having died due to crime or the cause of his/her death is suspicious, the prosecutor with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hall inspect the body and may conduct an autopsy based on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etc. Before the autopsy, the bereaved family shall be notified of the fact in advance, and their right to

know is protected by explaining the result of the autopsy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damag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any written autopsy reports are not sent to the bereaved families.

Whether family members are able, upon request, to commission independent autopsies

- 80 When an inmate who died in custody is suspected of having died due to crime or the cause of his/her death is suspicious, the prosecutor gives instruction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and conducts an autopsy at the independent National Forensic Service based on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ut of 98 deaths in custody that occurred during the last three years, a total of 71 bodies were subject to autopsies, all of which were conducted at the independent National Forensic Service.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6 of the list of issues

- 81 The Government relates to the inten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he State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human's natural dignity and the right to live, and have been recogniz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in the global community as it has not executed any death penalty since 1997. However, as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a material issue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the Government plans to comprehensively review this matter.
- 82 As of 28 April 2021, the number of prisoners on death row is 55, an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by courts or commuted to prison terms since May 2017. Aside from this, the number of prisoners on death row in 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is four, an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or commuted to prison terms since February 2016.
- 83 General treatment for prisoners on death row such as designation of a living room, religious activities, outdoor exercise, meal, medical treatment and sending and receiving of mail is same with that of other inmates, and the budget for confinement management per prisoner on death row is also same with that of other inmates. In particular, in-depth counseling and counseling with external experts are provided fo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normal confinement of prisoners sentenced to death penalty.

Articles 12 and 13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7 of the list of issues

(a) Measures taken to eliminate torture and acts of cruelty in military units

84 The Government amended the *Military Criminal Act* (hereinafter the "MCA") in 2016 to prevent violence,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acts of cruelty, etc., in military units and ensured punishment upon violence and threat between soldiers in military units regardless of the will of victims. Also, the standards for the determin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acts of cruelty were newly established (29 March 2016) to strengthen discipline on perpetrators.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regulates mandatory training on soldiers' fundamental rights, the relief procedure, etc. describes duty to report violence, acts of cruelty, etc. and states measures to protect informant's identity, seeking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military units.

— Whether to i) directly decide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persons in the chain of command, ii) prosecute and punish the responsible persons with punishment in line with the gravity of such acts, and iii) disclose the result of the relevant investigation to the public

85 With regard to verbal abuse, insults, violation and acts of cruelty in military units, the MND set the following standards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commanders and supervisors and the relevant staff officers based on the seriousness of the accident in the *Directive on Military Unit Management* (Ordinance of the MND) (see <Table 24>), reprimanding the persons in the chain of command. The trials made in the military courts shall be disclosed in principle as <Table 25>, and when a criminal trial is finalized, the result of punishment is being disclosed through the sentencing.

86 The MND launched the Gender Equality Committee of the MND (3 September 2018) comprising internal and external members of the militar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erforming gender-sensitive tasks in the military. Furthermore, the Ministry has operated the Sexual Distress Counseling Office and the Gender Equality Office to provide counseling about sexual distress to all soldiers and, when victims of sexual abuse occur, protect the victims and support treatment therefor. In 2019, MND carried out the *Fact-Finding Survey on Sexual Abuse in Military*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soldiers about sexual abuses, the actual status of such damage, etc., and find the demands for improvement of polic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of eradication of sexual abuse is increased.

87 Also, MND has prepared various guidelines and amended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activities to prevent sexual abuse by amending and enacting the *Directive on Military Unit Management* to clarify the time to take a protective measure for victims of sexual abuse and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 88 **Any consideration given to repealing article 92-6 of the MCA**
- The Military of the ROK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the homosexuality of soldiers. However, the crime of indecent act provided for in Article 92-6 of the MCA may be subject only to indecent acts that relax discipline in the military, and it pays attention to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e homosexuality of soldiers by establishing relevant regulations (Article 253 of the *Directive on Military Unit Management*). But as some point out that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crime of indecent act are discriminatory against homosexuals and not clea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currently under progress agai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measures will be taken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future. Also, the MND and the Armed Forces strictly judge whether an act constitutes a crime of indecent act up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prevent excess punishment, and try to minimize prosecution for the crime of indecent act.
- 89 Whether to abolish Article 92-6 of the MCA needs to be determined in a legislative manner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legislative intenti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etc., in connection with the given provision.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deemed that such discrimination had reasonable ground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HunBa258 rendered on 28 July 2016, etc.), the MND does not crack down the crime of indecent act, and the number of punishment imposed by the Military Court on the crime of indecent acts provided for in Article 92-6 of the MCA was five in 2018 and two in 2019.

(b) Whether the MND and the NHRC have established the office of the military ombudsman

- 90 The Government currently select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the military ombudsman as a national agenda, seeking amendment to the NHRCA to establish the office thereof in the NHRC. As of May 2021, one bill to establish the office thereof in the NHRC presented by representatives and another bill to establish the office thereof in the NA presented by other representatives are pending at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21st NA, and the MND is actively cooperating for passing the bills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the three bills in that connection before the NA

- 91 All the existing bills were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20th NA, and the NHRC is preparing for government legislation.

- 92 — **Information on the mandate and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ombudsman**
- Refer to paragraph 38 on the details of NHRC's *ex officio* investigation. And there will be an amendment of the NHRCA to establish the office of the military ombudsman and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and enable visit and investigation in the military units based on the resolution if the necessity is recognized.

(c)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in military units

- 93 The "Help Call" helpline of the MND is a communications channel within military units operated based on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Rules on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and Article 173-2 of the *Directive on Military Unit Management*. (For the details of operation, see <Table 26>.)

— **Results of the research project initiated in April 2017 aimed at diagnosing the statu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 94 The MND and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hereinafter the "KIDA") jointly visited military units and conducted a collective survey for 1,764 officers and 3,917 soldiers between 11 and 30 September 2017, to diagnose the living condition and human rights condition of military personnel and use the survey results to establish defense polici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and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e future. The result of the survey about abuses and acts of cruelty is shown in <Table 27>.

— **Whether they have had an effect on reducing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 95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human rights status survey jointly conducted by the MND and KIDA in 2018, the ratio of soldiers who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 decreased from 7.5% in 2017 to 6.8% in 2018, and that of officers also fell from 4.3% in 2017 to 4.0% in 2018.

Article 14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8 of the list of issues

- 96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communicate with the victims, civil societies, etc. to redress the issue of sexual slavery victim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so-called "comfort women," based on a victim-centered approach. The Korean government held the "Public-Private Consultation Meeting" on 4 June 2021, presided over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public-private meeting on July 7, 2021, presided over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hear the opin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victims and academic expert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seek measure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ased on a victim-centered approach. Also,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raise awareness of the global community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an unprecedented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women as well as a universal human rights violation under armed conflicts, that goes beyon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multiple presentations at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Third Committee, the Open Debate of the Security Council, etc.

- 97 To support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ose registered as persons eligible for livelihood stability support pursuant to the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hereinafter the "CWA") are given support for livelihood stability with KRW 43 million of the first special subsidies and subsidies for livelihood stability every month. Also, as the victims are aging, the demands of support for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services are increasing and, as a result, medical benefits and costs of nursing services are being provided for. In addition, for the emotional support for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livelihood status and the demands for support are identified through regular contact and visit, and a survey on the livelihood status and satisfactory level is carried out every year involving the victims and their guardians to assess such suppor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reinafter the "MOGEF") has operated the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ince August 2018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general management and integration of research related to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systematic progress of follow-up research and training of next-generation. (For major relevant projects, see <Table 28>.)

In addition, it has put in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raise awareness about right history with various projects such as a national ceremony on the memorial day for the victims (Augus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relation to the victims,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rt competitions for adolescents, projects for private groups, etc. The CWA defines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gainst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on the matters in <Table 29>. The MOGEF decides and registers the persons whose damage as a sexual slavery victim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is identified in the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 for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Japanese Imperial Army to be the persons eligible for livelihood stability support, and support shown in <Table 30> i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WA. For training about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damage of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MOGEF has implemented commemorative projects such as provided in <Table 31>.

Article 16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19 of the list of issues

- 9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wide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in November 2018, described the measures in the provisions in June 2019, and presented a bill through representatives to ame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ereinafter the "DVA") to strengthen response at crime scenes by specifying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and the impact of temporary measure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on the violation of temporary measures in the 20th NA in November 2019 and the 21st NA in September 2020. In response, the NA promulgated the amendment thereto in October 2020. (Enforced in January 2021.)
- 99 With regard to sexual violence, to aggravate punishment on sexual violence using one's superior position, the Government amended the CA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ereinafter the "SVA") in October 2018 to aggravate the statutory punishment on the crimes of occupational indecent act and sexual intercourse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force. Also, the statutory punishment on grave sexual violence such as special rape was aggravated.
- 100 The CA and the SVA were amended and enacted to strengthen punishment on sexual violence crimes to adjust the standard age of statutory rape upward from 13 years old to younger than 16 in May 2020, newly insert the crimes of preparation and conspiracy for grave sexual violence crimes, strengthen punishment on illegal videos of adults, newly insert the crimes of possessing illegal sexual videos, etc.
- 101 The Government has protected and supported victims grounded on individual acts in relation to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etc., but as such violence is developed into various forms such as stalking,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using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the Government prepared the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with no blind spots with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established in December 2018. Based thereon, the authorities organized and operated the Committee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2020 to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take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polic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February 2020 and monitoring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and important measures. Also, those working in investigation institutions must take training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nd projects such a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have been sought.
- 102 The police, too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women who are customers of security. The KNPA established the "Women's Safety Planning

Officers" organization to eradicate crimes against women in May 2019. In the first half of 2018, the Cyber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Team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for Crimes against Women were newly established at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agencies across the country. In the first half of 2018, an "intensive crackdown on malicious crimes against women" such as illegal filming,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was strongly promot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 "special crackdown on cyber sexual violence offenders" was promoted and a total of 3,847 people were arrested, including those who have distributed pornography, through crackdowns on offline filmmakers and websites, web-hards and heavy uploaders, locked the DNS access of 150 obscene sites and closed 92. In 2019, the "focused crackdown on the eradication of web-hard cartel" continued to crack down on 62 web-hard drives, and 947 people including 119 operators and heavy uploaders were arrested.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caused by the case of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the Digital Sex Crimes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established and began operating in 2020 cracking down on a total of 2,807 cases and arrest 3,575 people. The proceeds of 51 cases were recovered.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triggered by the case of sexual exploitation via Telegram, it installed and operated the Spe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Digital Sexual Crimes in 2020 to crack down 2,807 cases and arrest 3,575 criminals, and retrieved benefits from 51 cases of such crimes. In addition, specialized and specified protection and support measures we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the victim was designated to provide support from the time of receiving a report to the post-mortem connection. As a result, 1,094 victims were subject to a total of 4,387 times of customized protective and supportive measures such as the deletion of related videos and connection with professional institution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xpand the manpower of the dedicated investigative team to improve professionalism, conduct intensive investigations,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nd protect victims by strengthening gender-sensitive education for investigators, and continue the promotion of strengthening education and on-site inspections.

- 103 The Government strengthens punishment on stalking crim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promulgated on 20 April 2021, to be in effect on 21 October 2021). Acts of stalking are defined as acts of approaching, following or blocking the way of a victim with no reasonable grounds against the will of the victim, and continuous and repeated acts of stalking are defined as stalking crimes.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y take an emergency measure when a stalking crime is likely to occur and urgent response is needed to prevent it. (The prosecutors need to apply for post-approval while the court needs to grant it.) When recognizing that stalking crime is likely to repeatedly occur, the prosecutors may apply for tentative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detaining to the court *ex officio* or upon the applic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When recognizing

that such measure is needed for an effective investigation, hearing or protection of the victim of the stalking crime, the court may rule a tentative measure. Those who committed stalking crime face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fines up to KRW 30 million, and those who carry or use a lethal weapon or a dangerous object face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fines up to KRW 50 million.

- 104 To strictly respond to new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gave instruction and provided training on strictly responding to gender-based crimes of violence by launching and operating a task force for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holding a joint workshop with relevant agencies, strengthening the internal case processing standa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providing capacity strengthening training to prosecutors dedicated to crimes against women and children. Also, strict punishment is imposed on new types of digital sex crimes by strengthening the case processing standards for sexual exploitation video criminals (enacted on 9 April 2020).

Whether marital rape has been included as a separate offence in the Criminal Code

- 105 Currently, marital rape may be punished under the acts in place, and the Supreme Court also described that the objects of rape provided in Article 297 of the CA include legal spouses, and the crime of rape may be constituted not only in the cases where the marital relationship is broken but also in the cases such relationship is practically maintained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4788). Accordingly, necessity of separate legislation is not that significant.

Whethe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enefit from protection, including restraining orders

- 106 Temporary measures and victim protection orders including separation such as the leaving of the perpetrator of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s, and restraining orders via communications devices may be imposed under the acts in place the Government strengthens restri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criminal punishment, not fining, is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emporary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DVA (promulgated in October 2020, enacted in January 2021). In addi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visit" was added in the type of victim protection orders in consideration of repeated crime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right to visit children under the given amendment, and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on the violation thereof.

Whethe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access to adequately funded shelters throughout the country

- 107 The Government has operated 65 shelters across the nation as of the end of 2020

to suppor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be protected in a stable place and to stand on their own feet as members of society, and has provided 344 rental houses for them to seek communal living.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0 of the list of issues

- 108 The Government has regularly checked entertainment places for foreigners since 2014 in cooperation with the MOGEF, and has made efforts to prevent sexual violence by amend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June 2018) to restrict employers who have a history of sexual crime from inviting foreigners. In addition, from January 2020, the authorities review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of human trafficking submitted when granting the extension of stay for the holders of Art and Entertainment (E-6) visa and check whether there was damage. Also, when foreigners are going through the relief process of civil and criminal rights under the court's trial, and the investigation and other acts due to the damage of serious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may not allow their stay in South Korea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original period of stay, they are granted the Miscellaneous (G-1) visa and may get a job.
- 109 A foreign worker is allowed to change the place of business if exploitation or unfair treatment, etc., against migrant workers occurs (Article 25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hereinafter the "FWA")), and the grounds for the change were expanded to 36 kinds such as delay in payment of wages and sexual violence from April 2021. To prevent sexual violence, unfair treatment, etc., against migrant workers, the FWA was amended in April 2021 to ensure that the employers who are granted employment permission for the first time take training on labor-related acts and regulations, human rights violation, etc. In the employment training course for migrant workers, training on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response thereto is provided, and leaflets produced in languages of 16 dispatching countries are distributed for prevention and damage relief of sexual violence against female migrant workers. Also, migrant workers, who are at the early stage of their stay in South Korea, and their employers are monitored, and especially sexual violence, unfair treatment, confiscation of personal documents, etc., are reviewed in the instruction and inspection of the places of business. The employers whose employment permits cancelled due to the violation of labor-related act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unfair treatment and who were punished due to confiscation of personal documents pursuant to the *Immigration Act* are restricted from employing foreigners. In particular, for the immediate protection of victims, the authorities shall allow them to change the place of business even if the investigation is in progress (i.e., emergency change in business place), immediately isolating them from the perpetrators, provide specialized counseling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etc., by designating dedicated counselors in the

-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9 centers), and prepare the Anonymous Report Center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reinafter the "MOEL") to protect and support such victims.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a favor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foreigner-related support institutions (i.e., protection facilities, shelters, etc., for foreign worker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 110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hereinafter the "KLAC") under the MOJ provides legal aid services to migrant workers who do not receive sufficient legal protection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or lack of knowledge about the laws. (Legal counseling and representation in a lawsuit, see <Table 32>.) The Corporation supported representation in lawsuits for 39,466 foreign workers and 231 sailors who suffered delay in payment of wages in the last three years. The Interpretati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Korea Labor Foundation)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for such legal services.
- 111 The Counseling Center for Foreign Workers (1 center) and the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44 centers) introduce migrant workers to use shelters when the damage that they suffered is identified during counseling via visit or call. In particular, the Hub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9 centers) designate dedicated counsellors to immediately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migrant workers who have suffered sexual violence, unfair treatment, etc. In addition, the Counseling Center and Support Centers provide contact information and location of the institutions operating such shelters to migrant workers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and such operators introduce the process to move to the shelters after checking the workers' will, quickly rescuing the interest of migrant workers who do not have a residence. The MOEL supports the institutions operating the shelters of the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to ensure female migrant workers to use the shelters (17 centers across the nation, (see <Table 33>) as of 2021). The shelters provide a residence to migrant workers (visas E-9 and H-2) who changed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Government allocated approximately KRW 60 million of budget (as of 2021) to subsidize foods (KRW 300,000 every month) to the institutions operating each shelter.
- 112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9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verseas Korean nationals 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ROK are eligibl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employee insured may be eligible when employed by the place of business subject to the subscrip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ose who hold the status of sojourn and reside in South Korea for six months or longer shall become self-employed insured, all of whom are provided with medical services same as that for local citizens.
- 113 The grounds on which foreign workers (E-9) can apply for a change in employment provided in Article 25(1) of the FWA are shown in <Table 34>. In particular, the notification of the grounds for a change in employment for which foreign workers are not responsible was amended in April 2021 to include serious disaster caused by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sion

of accommodations in unlawful temporary buildings in violation of the *Farmland Act* and the *Building Act*, suggested resignation for the reason of an agricultural off-season or a closed season of fishing, and non-purchase of social insurance policy that must be purchased to become 36 reasons. As a result of operating the employment change system for foreign workers (E-9), foreign workers (E-9) make 50,000 applications per year on average for a change in employment (which should be processed within seven days) and 99.9% of the applications are approved.

- 114 Migrant workers including female migrant workers may report to a local labor inspection office if the employer violated labor-related acts such as delay in payment of w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bor inspector shall inspect the fact against the persons subject to the inspection (informant, reported person, suspect, testifier, witness, etc.). As a result, in the cases of immediately recognized crimes or where an employer who was granted a period for correction failed to implement such correction in due time, the inspector shall begin the investigation and send the case to the competent prosecutors' office, suggesting indictment. The number of cases s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suggesting indictment between 2017 and March 2021 was 19,841 in total.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1 of the list of issues

- 115 Refer to the answer in paragraph 55 on the amendment of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When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t POI is not referred to the authority in charge, the applicant concerned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hen an 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a non-referral decision is found pending, the return procedures of the claimant are suspended until the appeal becomes final.
- 116 The *Immigration Act* distinguishes the detention for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of foreigners who violated the acts from the detention for the execution of foreigners under a deportation order. The period of the former detention is regulated as up to 20 days. However, the latter detention is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of a deportation order, and the detention period terminates upon the foreigner's departure from the ROK under a deportation order. As for the latter, the *Immigration Act* does not specify the upper limit of the detention period by stating that "if it is impossible to immediately repatriate the person out of the ROK, until the person can be repatriated." This is because, when the upper limit of the detention period is regulated, as a foreigner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refuses to leave the ROK with no reasonable grounds, whether to execute the law may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intent of the foreigner. Nonetheless, such foreigners are not detained indefinitely. An immigration control official has a legal obligation to immediately execute a deportation order, the limit of the purpose and time of a detention order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also the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MOJ in which private members and government members participate in the same number deliberates and controls such detentions. With such control measures, foreigners are being detained for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execution of a deportation order. It is deemed relevant judicial control is sufficiently imposed considering that an objection may be filed against a detention order or a deportation order pursuant to Articles 55, 59, etc.,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e suspension of an execution of a detention order may be filed to the court through the complaint for the cancellation of a deportation order or a detention order.

- 117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Detention of Foreigners*, the Government restricts the detention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refrains from the detention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o the maximum, and even if such children are inevitably detained due to a criminal offense, it is regulated that the authority shall prevent long-term detention through regular interviews and assign them to special detention rooms equipped with additional facilities. Also, 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Act* is being prepared to stipu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detention of criminal minors (i.e.,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Deposit of Performance Bond about Deportation Orders* started from January 2020, has helpe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deportation orders, minimize the detention of foreigners who violated the acts, and minimize the detention period by temporarily suspending the detention of the child or parent when the reason for temporary suspension of detention is recognized.
- 118 To improve the material living condi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foreigners under detention will be dispersed by building a new detention facility of the Seoul Southern Immigration Office on 4 March 2020 (capacity of 56 persons), planning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a new office building in Ulsan and remodeling the detention center (capacity of 160 persons) in the second half of 2022. Also, with regular inspection on detention facilities for the replacement of aged heaters, aged air conditioning systems, showerheads to prevent self-injury, etc.,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mprove such material conditions. The Government has also allowed detained foreigners to access the Internet upon request at foreigner detention centers since August 2018. In-house doctors regularly conduct internal medical treatment fo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etained foreigners, who may also have access to external medical clinics if they want. Especially in April 2019, psychological counsellors were hired and assigned to three detention centers, to resolve detained foreigners' stress and promote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 119 At foreigner detention centers, detainees may do outdoor exercise five times a week, and the "Dong-Gam Program" is under operation which includes training on Korean language, health management, religion, entertainment, etc., for psychological stability. Certified hygienists manage hygiene in detention centers, and air purifiers were installed.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its effort by securing additional budgets, etc., to improve such residential environments.

- 120 In particular, refer to the activities of the NHRC in paragraph 38 on its investigation.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also regularly conducts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of detention centers and pays visits for investigation pursuant to the relevant acts. Detention centers such as foreigner detention centers ensure that detainees may freely make outside calls by installing public telephones in detention rooms and displaying the contact information of embassies and the notice on the procedure on remedie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2 of the list of issues

- 121 The Government amended and enacted Chapter XXXI of the CA, the fundamental act that regulates the State's right to punishment, as "Crimes of Trafficking in Persons" on 5 April 2013, to stipulate the concepts of human trafficking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crimes had been punished under various punishment regulations, but the provision of the crimes of human trafficking (Article 289) was newly inserted to comply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more actively implement the Palermo Protocol. Considering that human trafficking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the provision of universality (Article 296-2) was inserted to punish foreigners who commit the crimes of human trafficking outside South Korea under the laws of the ROK. Under the amended CA, kidnapping, abduction,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labor exploitation, sex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the sale and purchase of organs, etc., shall be punished, and the new provisions were inserted (Article 292 of the CA) to strictly punish persons who recruit, transfer or deliver another with the intent to commit kidnapping, abduction, human trafficking, etc., as an individual crime.
- 122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hereinafter the "HTA") in reflection of the concer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ies that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provided in the CA is narrow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not sufficient. The Government launched a task force of relevant ministries under the lead of the MOGEF in 2020, reviewed the criminal defin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domestic law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 protection system for foreign victim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governing human trafficking, etc. The bill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on 24 March 2021 and promulgated on 20 April. The aforementioned act will be enacted from 1 January 2023.
- 123 The given Act defines the crimes related to human trafficking dispersed across various acts has the MOGEF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general measure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jointly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regulates general matters about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and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ers. Under the Act, the MOJ participate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general measures to identify,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ith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OGEF, and provides training to raise the awareness of investigators about human trafficking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respond thereto.

- 124 The HTA, as intended to protec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does not include separate punishment provisions, but all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and labor exploit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and some crimes including traffick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special acts including the CA and the *Act on the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hereinafter the "CSA"). In addition, the aforementioned Act regulates that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victims that the crimes of human trafficking are recognized even without acts such as abuses, threats, fraudulent means, and force, protecting victims in a wider range provided in the Palermo Protocol ("children").
- 125 The Government has the public institutions control the overall process of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rights of foreign workers such as human trafficking in persons and labor exploitation and provide employment training, including training on the labor-related acts, before and after foreign workers arrive in South Korea so that they may recognize and enjoy their rights and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More labor inspectors were hired for effective monitoring, and a total of 1,178 supervisors (911 labor inspectors and 267 occupational safety supervisors) were hired between 2017 and 2019. In addition, by selecting employers who are highly likely to exploit the labor of the disadvantaged including foreigne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pervisors inspect such employers about whether they have forced long hours of work, abused the workers, complied with the minimum wages, etc., and impose criminal punishment, etc., upon the identification of unlawful acts. As a result, labor supervisors inspected 22,574 places and found a total of 58,692 unlawful cases in 2017, and inspected 26,082 places and found 70,009 unlawful cases in 2018.
- 126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emale migrant workers who hold the Art and Entertainment (E-6) visa for which the concerns about the chances of human trafficking have been pointed out,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conduct random inspections on entertainment places where foreign entertainers work, through joint enforcement team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KNPA.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cases of human trafficking against those arriving in South Korea under the visa exemption agreement, the MOJ regularly operates enforcement periods for unlawful entertainment and massage shops and unlawful employment brokers. The MOGEF also conducts inspections on places that employ female foreigners, jointly with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KNPA,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such as the arrangement and forcing of sex

trafficking.

127 Intensive crackdowns of unlawful employment brokers were carried out in May 2019 intensive crackdowns of the unlawfully employed in the entertainment and massage shops, employment brokers, etc., were carried out in June 2019, and there were intensive crackdown periods of unlawful entertainment and massage shops in September, November and December 2019 and January and November 2020. The Government signed an MOU with the Thai Government to promote a reasonable and orderly migration, considering the ROK-ASEAN Special Summit on 25 November 2019, and the intergovernmental efforts will be continuously mad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issues by signing MOUs with other countries. Also, the consuls conduct interviews with applicants for the Art and Entertainment (E-6) visa to check the authenticity of their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the Init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s provided to those arriving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to prevent sex trafficking and the suffering of victims

128 To resolve difficulties to recogniz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forcing sex trafficking by permitting entertainment agencies to represent, etc., in the process of residence permit, the MOJ abolished the provision of representation in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process of granting permission to stay for foreigners, restricted the issuance of visas for citizens from countries with 40% or more of overstay rate, and checked whether there had been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from January 2020. When a foreigner visits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for extension of residence, etc., one must fill in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and whether one is insu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all be confirmed. Also,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effort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distributing the guidelines about remedy and contact information of relevant agencies upon the application for visa, foreigner registration and extension of stay.

In the ROK, victims of the crimes of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for sex trafficking, and also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cases where such acts constitute a forced unlawful act provided in Article 12 of the CA.

130 The prosecutors have taken measures to strictly respond to the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of the crimes of sex trafficking using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Indicators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published by the NHRC and the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funded by the MOGEF. Also, collective training on the overall criminal process of sex trafficking cases,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etc., is provided to prosecutors dedicated to women and children twice a year.

131 The Government provides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with counseling, medical and legal support, accommodation and departure.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y also be given economic support such as medical costs, psychological treatment

by the Smile Centers and legal support by the KLAC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ey also may stay in a shelter for a specified period for the protection of their identification, and be given services such as support of a location system to the victims with the fear of retalia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support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the Danuri Call Center or "the third-party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service" operated by the MOJ's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for foreign victims of sex trafficking to have effective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immigration, and the victims may be accompanied by a person in a reliable relationship at the investigation by the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SA.

- 132 When a public official finds a foreigner who is staying in South Korea without any reasonable status of sojourn while being on duty, the *Immigration Act* grants public officials the obligation to inform the head of the office of loc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thereof, but such obligation is exempted when it is recognized that remedy and reparation is needed as priority, as it is likely that a foreigner without status of sojourn would not report the crime one is suffering from for the fear of deportation, or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crimes that exploit such a weakness. The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re also subject to the notification exemption system.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subject to such exemption to all public officials in September 2018, and the *Enforcement Rules* on the *Immigration Act* was amended and enacted for the clarification of legal grounds. Also, to prevent the cases where a foreigner without a status of sojourn does not receive a test in the fear of enforcement after the spread of COVID-19 in February 2020, the related press remedy and guidelines titled "the cost for a diagnosis and the exemp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in 14 languages) were distributed for the promotion of such system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3 of the list of issues

- 133 The Government amend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prohibit the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using tools or body parts from 2011. Later, the Municipal/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ave had each school designate an alternative training method considering the conditions, not to make training methods other than corporal punishment to be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cluded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of young children by teachers and staff of kindergarten facilities using tools or body parts in 2016, and was amended once agai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young children by prohibiting inflicting emotional distress on young children by loud voice or violent language, etc., in 2020.
- 134 A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relating to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may be misunderstood as allowing the corporal punishment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the MOJ presented a bill to partially amend the *Civil Act* to delete Article 915 thereof on 15 October 2020,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on 8 January 2021 and has taken effect since 26 January 2021.

- 135 In addition, with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in 2020, the grounds for local governments to have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child abuse (Article 22) were prepared, ensuring that local governments may effectively respond to child abuse that may occur at home, etc., by taking a step to immediately separate the abused child.
- 136 The Government has operated and held campaigns titled "the child abuse reporting period" to prevent tolerance against corporal punishment from leading to child abuse. To raise awareness about child abuse and prevent domestic violence, the Government designated 19 November as the Child Abuse Prevention Day and one week therefrom as the Child Abuse Prevention Week. By rewarding persons of merit who prevent child abuse and showing a promotional video, the authorities raised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facilitated active reports. In addition, the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 eradication week were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 137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develop positive and non-violent training programs to replace corporal punishment after prohibiting it in kindergartens and schools. Each local government and office of education has prepared various daily education programs not dependent on corporal punishment.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4 of the list of issues

- 138 The MND amended the MCA to add the provision of special cases to punish a military person who assaults or intimidates another military person even in cases where the victim does not want punishment thereon, which had not been punishable, to punish acts of assault or intimidation in the military without exception (Article 60-6 of the MCA). It is expected that with such amendment, assault and intimidation in the military may be eradicated, and an appropriate culture within the military where human rights is protected may be created.
- 139 The Act in place regulates the duty to report by stating that, "Where a soldier becomes aware of any private sanction committed by other soldiers such as beating, verbal abuse, harsh treatment, bullying or any sexual molestation or sexual violence during his/her barrack life, one shall promptly report it to his/her superior or notify it to the officer for the protection of the soldier's human rights or a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etc." (Article 43(1)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Also, as a person who reports a crime subject to punishment pursuant to the MCA is a whistleblower, by establishing the provision that a person who discloses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whistleblower or a fact that enables another

person to infer that one is a whistleblower, etc., or takes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 whistleblower, etc., the authority protects whistleblowers while it punishes perpetrators without exception (Article 15(1) and Article 30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Especially, the Ordinance of the MND regulates that in the case when a superior in the chain of command acquiesced, aided and abetted, concealed or protected the facts of sexual violence, etc., a resolution for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requested, and the misdeed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of persons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shall be considered. In such cases, favorable circumstances such as prizes and decorations sha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140 The acts in place regulate the "Judge System" under which an officer not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may participate in the trial as a judge only in exceptional cases (i.e., the cases designated by the commander that needs advanced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military, among the cases prosecuted only for the crimes provided in the MCA except for rape and indecent act and the crimes provided in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the MND prepares the amendment to the Act to delete the provision as the aforementioned "Judge System" is deemed to have a chance of violat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decision. Also, it has implemented the Guidelines to strictly apply the system in line with the intention of abolishing the Judge System before the amendment thereto, and as a result no officers without a license have participated in a trial as a judge since 7 July 2017. The MND will continue to seek the amendment to the Act to abolish the Judge System.
- 141 The MND has made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and as a part of such effort, it amended the act on 4 February 2020 to substitute the guardhouse detention, one of the disciplinary actions on soldiers, which may be against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for the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System*. (For the details refer to <Table 35>.)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5 of the list of issues

(a) On the amendments to Article 24(1) and (2) of the MHA

- 142 As the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4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the "MHA") was made in September 2016, the aforementioned Act was amended to become the MHA that regulates the process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o require (i) an additional diagnosis of hospitalization by a medical specialist of another medical clinic other than the clinic for hospitalization and (ii) an examination by the Committee for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the "LEC"). For details of the amendment refer to <Table 36>.

(b) On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and ensure that involuntary psychiatric hospitalization is the last resort based on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applicability

- 143 The Government wholly amended the MHA in 2016 to improve the process related to involuntary psychiatric hospitalization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o be strictly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he system of hospitalization for diagnosis for two weeks prior to the hospitalization for treatment is introduced, and only when two or more psychiatrists present during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for diagnosis are of the same opinion that the patient fulfills the two requirements: (i) necessity of hospital treatment; and (ii)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considering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damage his/her own health or safety or others, the patient may continue to be hospitalized. Also, the LEC comprising a legal profession, a psychiatrist, a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an expert, the patient him/herself, etc., is launche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head of the psychiatric institution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the hospitalization within three days of the decision of hospitalization, and the said Committee shall inform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admission within one month. Furthermor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may continue only for the first three months, and the extension of the hospitalization period requires the deliberation by the Mental Health Examination Committee.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intention of "a face-to-face investigation on the legitimacy of admission by an investigator" was confirmed through the notification of rights when involuntary hospitalization was applied for, the rate of face-to-face investigation conducted between 2018 and 2020 stood at 24.7%. (The number of actual investigation conducted: 21,095.) In addition, to hire more medical specialists at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reinafter the "MOHW") plans to review the measure to secure more medical public officials and to increase wages, etc.

(c) Any steps taken to ensure that the court always seeks the opinion of a psychiatrist who is not attached to the psychiatric institution admitting the patient and that any involuntary hospitalization in psychiatric institutions is monitored by an external body that is independent of the health authorities

- 144 A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 patient may be hospitalized for up to three months only with the same opinion of two or more medical specialists presented within two weeks from the first day of hospitalization. After the initial hospitalization, the patient needs to receive the opinions of two or more medical specialists twice every three months and then every six months. Especially for the hospitalization by a legal guardian, the two medical specialists shall belong to "different medical institutions" and one of them must work for a national, public or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The judicial hospitaliz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a change in the

current judicial system, but the LEC provided in the MHA, which is composed of an attorney-at-law, a psychiatrist, a civil society, etc., is in the form of quasi-judicial hospitalization.

(d) Whether persons involuntarily hospitalized enjoy effective legal safeguards

- 145 Under the amended Act, to fully respect the will of the patient,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procedure is also introduced in the exa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admission, under which the investigator of the LEC directly listens to the opinion of the patient upon the request of the patient or *ex officio* of the commissioner of the LEC.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operate the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s for persons hospitalized in psychiatric institutions, etc., or the legal guardians thereof may file a petition for the examination for discharge or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there is remed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the given persons may file a petition for discharge any time under the *Habeas Corpus Act*. In addition, Article 68 of the MHA stipulates that except in cases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no person shall hospitalize or admit any mentally ill person in a mental medical institution or mental health sanatorium or exte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or admission without a direct diagnosis by a psychiatrist, while Articles 72 and 75 thereof regulate the prohibition of detention, cruelty, etc., and the prohibition of isolation or other restrictions, respectively. To be specific,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admission pursuant to Article 45 of the MHA, 1,051 cases were determined for discharge between May 2018 and December 2020.

(e) On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complaint mechanism and counsel for persons involuntarily hospitalized in psychiatric institutions to investigate all complaints on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 146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HRCA includes a psychiatric institution equipped with a detention facility provided in the MHA. Upon receiving a complaint, the NHRC makes various recommendations for investigation, practices and policy to the MOHW, and the Division of Mental Health Policy reflects and implements such recommendations.

Other issues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6 of the list of issues

- 147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hereinafter the "CTA") was established in 2016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against terrorism the authorities are engaged i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ased on the laws and procedures by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important matters of policies related to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or an example, see <Table 37>.
- 148 The process for such measures was implemented under the procedures provided in the acts in place including the CPA. As the judicial process on the suspects who financed terrorism (shown in <Table 37>) was also based on that for general domestic crimes, such measures did not affect human rights safeguards in law or in practice. For example,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has been operating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which may be caused by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relat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CTA, but no complaint has been filed relating to human rights to date.
- 149 The Government has dealt with terrorism under the procedures provided in the CPA, which has the suspects' right protection system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laws. To be specific, Section 1 of Chapter 9, Section 2 of Chapter 1, etc., of the CPA regulate the due process relating to arrest, prosecution and detention in detail, and the aforementioned Act materializes the right to counsel,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pecial protection of minors,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etc.
- 150 Also,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is under opera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which may be caused by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re are complex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with the provision of aggravated punishment on a public official of intelligence or investigation institutions who makes a false accusation, commits perjury or forges any evidence of the crimes of forming terrorist groups, etc. With regard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9 of the CPA, the confession of a criminal defendant which is extracted by torture, violence, or threat or after prolonged arrest or detention, or by other means,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 151 The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of the Prosecutors' Office are selected from those with extensive knowledge about the Constitution and the CPA based on strict standards. They are continuously provided with the training about human rights protec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ruelty and discrimination, fair investigation and principled discretionary investigation, and

the methods of collecting evidence based on due process. The prosecutors shall make effort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confirming whether human rights were infringed during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interview with the arrested suspects. Especially, the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in charge of the crimes of terrorism are given training on the characteristics, response procedures and proceeding standards of the crimes of terrorism with the counter-terrorism manual distributed, and also provided with training on important investigation cases, methods of collecting evidence, due process prepar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etc., every year. Furthermore, in April 2018, the prosecutors in charge of terrorism were given training by a U.S. federal prosecutor and an FBI investigator, and the group of prosecutor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visited various counter-terrorism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Division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continuously making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advanced respons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system against terrorism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r the supervisory system, etc., during the course.

- 152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TA,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which may be caused by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is engaged in human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protection, processing civil petition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educating related agencies on human rights. With regard to the response to civil petitions thereof, civil petitioners may be informed of the result within two months of the date of receipt except for inevitable cases when they submit the statement via mail, fax, email or E-Petitions to the offices supporting the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Even in the given inevitable cases, civil petitioners are informed of the grounds therefor and the processing plan. The civil petitioner who needs remedy for right relieved may request the introduction of legal aid, accusation or investigation, deliberation of punishment on the party or the responsible person, etc. No complaints were received on the given issue.

Reply to the issues raised in Paragraph 27 of the list of issues

- 153 Refer to <Table 38> on the efforts mad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in other situations of confinement.

Appendix

Table 1

Overall Procedure Ensured in Case of Being Investigated When Charged for Violating the Rules to be Observed in the Prescrib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by Article 107 of CIA and Article 214 *Enforcement Rule* thereof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9 of the *Enforcement Rules* thereof, there are precautions taken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after explaining the reason for investigation, a sufficient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is ensured to the inmates under investigation and
2.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for committing an act that violates the criminal law, the suspect shall be notified that the person has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the right to appoint a counsel in accordance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investigator is required to write the detainee's response in written form by handwriting after asking once more on the intention to make a testimony or not.
3. In addition, in order to verbally notify the prisoner on the information of rights and remedy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confirm that the person understood the provided information, after the investigation is over, whether there has been any coercions, assaults or threats to make a statement by the investigator, whether you have been notified of you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veto and the right to appoint a counsel, whether all statements are true, and if there were any other difficulti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favorable evidence or anything else the person would like to say shall be asked and written in handwriting and
4. After confirming that the statement of testimony is written as stated by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that there are no errors, omissions or changes, if there are no abnormalities, the person is required to seal between pages and sign on the statement of testimony by hand.
5. Furthermore, even in case of making an objection in verbal or writing after the investigation and the disciplinary action is taken through the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it shall be informed that the rights to interview with th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6 of the CIA, to raise a petition as provided in Article 117 thereof and to file a complai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NHRCA and
6. In addition, inmates are notified that they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an administrative lawsuit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aware that there is a punitive measure and provided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specific appeal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appeal. Various measures and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and implemented to ensure the right to defense in order to seek practical remedies.
7. In case when a foreign detainee is investigated, a prison guard with fluency in the foreign language is designated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r another peer detainee with the same nationality may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give adequate assistance and to make the detainee have mental comfort as such. Also, there are various efforts for remedy of foreign detainees like providing necessary legal knowledge to foreign detainees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tes.

Table 2

Main Contents on 「Plan to Materialize the Counsel's Right to Participation」

1. Legal counsels wh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re ensured to advise and counsel the suspect. However, in cases where the counsel's advice interferes in the interrogation or divulges the secret of the investigation, etc., it is possible to restrict the participation of counsel by refer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0HunMa138 rendered on 23 September 2004).
2. In case of interrogation for long duration, the suspect's right to rest is ensured, in necessity, the counsel may request the police officer for a rest time, and the police officer ensures the rest time with consideration of the suspect's health status.
3. When the counsel participates in the interrogation, the actual assistance is ensured by providing him/her with the seat next to the suspect.
4. When the counsel is appointed, the suspect must be ensured of appropriate time for the counsel to participate through consulting time and place for interrogation beforehand, and during the consultation, the counsel is explained of the given case's title and the gist of the facts of the crime. In particular, when a suspect is feeble minded, mentally defective, arrested or detained, he/she must consult with the appointed counsel about the time and place of the interrogation, and must be able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even in an emergency situation.
5. The counsel is ensured to take notes of the interrogation to the maximum and to use electronic devices such as notebook, tablets, PCs for taking notes, while the police officers are banned from the act of checking out the notes written by the counsel.
6. Pursuant to Article 243-2 of the CPA, if the defense counsel requests a statement during interrogation, it shall be ensured to the fullest extent unless there is a good cause. As above, the measure to materialize the counsel's participation to ensure that the suspects are provided with substantial assistance of counsel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was reflected in the *Regulations on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Presidential Decree) through the amendment to and enactment of the law with the reform of investigative power. The measure to materialize the counsel's participation may also be applied to suspects not arres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suspects are detained or not, and under the provision that the counsel's participation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of and the interview with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provided for in Article 14 (Victim or Witnesses, etc.)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ule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t is recognized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counsel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during police investigation.

Table 3

Statistics on Medical Examination available for Inmates

Year	Number of Items in Medical Examination
Since 2005	22
2019	31
2020	32

* The number of inmates who underwent a medical examination per year increased from 20,643 in 2005 to 40,242 in 2020.

Table 4

Statistics on Police Training

		Trainees	Training Period	Total Hours	Note
2020	H1	Police Troops Nationwide	18 May-24 Jul.	22 Hours	Training hours adjusted due to COVID-19
	H2	Police Troops Nationwide	26 Oct.-11 Dec.	25 Hours	
2019	H1	Police Troops Nationwide	4 Mar.-29 Mar.	40 Hours	
	H2	Police Troops Nationwide	26 Oct.-11 Dec.	40 Hours	

* The human rights and safety training is joined by outside lawyers and the investigators of the NHRC as instructors. In simulation training, corpsmen think hard about how to respond to each mock situation assumed by themselves and discuss and draw relevant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ther than intensive training, each unit frequently provides human rights and safety training repeatedly such as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t the scenes of demonstrations and proper exercise of physical forc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able 5

Eight Recommendations from the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Death of Baek Nam-Gi

1. To announce a statement over the investigation result and to apologize the victims' family through consultation
2. To withdraw the lawsuit filed by the country
3. To establish guideline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o protect assembly and demonstration
4. To ban the use of water cannons at the sit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5. To establish an emergency relief implementation plan when establishing a security plan
6. To conduct a fact finding investigation through objective and independent procedure when the police's use of force leads to a serious harm to life and body of citizens during the association and demonstration

7. To reserve the record of radio commands for a certain period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onsite response at assembly and demonstration
8.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demonstration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including shifting of paradigm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minimizing notice of prohibition

Table 6

Outcome of the Proceedings and on Any Redress on the Sewol Ferry Accident

- (i) After the State had given up to raise an appeal, part of the plaintiffs appealed, and the appellate trial has been under progress (the date is expected to be later than December 2018);
- (ii) Twenty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whose bodies havenot been found raised a lawsuit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valued at KRW 1.9 billion) in April 2019, and the first instance trial has been under progress.
- (iii) The bereaved families who received compensation under the Special Act above filed a suit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valued at KRW 24.1 billion) about difference between compensation recognized in the ruling of the lawsuit fo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raised by the other bereaved families and the one they received as above, and the first instance trial has been under progress (the date is expected to be later than March 2019).

Table 7

Human Rights Code of Conduct in Police (Ten Articles in Total)

1. Principles of Human Rights Protection
2. Compliance to the Due Process
3. Principles on Proportionality
4. Principle of Presumed Innocent and End in Acts of Cruelty
5. Refusal of Wrongful Instructions and Prohibition of Any Disadvantages from the Act
6. Anti-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the Disadvantaged Persons
7.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8. Protection of Victims from Crime
9. Prevention and Measures of Risk Occurrence
10. Human Rights Training

Table 8

Pre-safety Diagnosis and Onsite Safety Activities from Onsite Safety Inspection Team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 (Pre-safety diagnosis) An overview of risk factor analysis on the venue, number of participants and methods (stage, broadcast vehicle, demonstration equipment, etc.) of an assembly or an event, determining the scope and method of onsite pre-safety diagnosis
- ▶ (Onsite safety activities) △ Checking safety risk factors such as subway ventilation vents, manholes and falling objects at construction sites during assembly marches, △ proper guidelines when blocking assembly participants and site safety verification such as equipment·experience scale

Table 9

Status on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Instigation, etc.) Prosecution Etc. in the Latest 6 Years

Category Year	Title of the Crime	Number of Prosecution (Persons)	Number of Detention (Persons)	Number of Conviction (Persons)
2020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6	0	0
2019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3	0	0
2018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2	0	4
2017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11	2	11
2016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16	10	10
2015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 Instigation, etc.)	42	13	8

- Including the cases where there is another charge other than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Propagation and Instigation, etc.)

Table 10

Oper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 Center by the Human Rights Bureau of the MOJ

- i) establish a video investigation system, a face-to-face complaint system and toll-free report line and distributed the report formats for human rights violation and free envelopes, complaint boxes, etc.
- ii) directly check and proceed with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by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 etc. when human rights violation as well as torture and ill-treatment is expected to occur in considera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such as survey on various detention facilities, visit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ntelligence gathering

Table 11

Status of Prosecution Investigation of Complaints related to Torture Act of Cruelty of Criminals in accordance to *Criminal Act* an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Year	Category	Receipt	Proceedings					
			Total	Claim for formal trial		Claim for summary order	Non-prosecution	Etc.
				Detained	Not detained			
2019	(1)	682	676	0	1	0	650	25
	(2)	1,116	1,119	0	1	0	1,051	67
	(3)	0	0	0	0	0	0	0
	(4)	128	119	0	0	0	101	18
2018	(1)	703	721	0	0	0	650	71
	(2)	1,021	1,051	0	2	0	911	138
	(3)	5	5	0	0	0	5	0
	(4)	119	122	0	1	0	117	4
2017	(1)	564	595	0	0	0	572	23
	(2)	1,017	1,043	0	1	0	923	119
	(3)	0	0	0	0	0	0	0
	(4)	103	124	0	1	0	112	11
2016	(1)	463	451	0	0	0	442	9
	(2)	885	881	0	2	0	811	68
	(3)	3	3	0	0	0	3	0
	(4)	165	157	0	2	0	144	11
2015	(1)	402	450	0	0	0	443	7
	(2)	853	877	0	1	0	798	78
	(3)	0	0	0	0	0	0	0
	(4)	123	153	0	0	0	153	0

* (1) Abuse of official authority, arrest & confinement (2) Violence in Articles 124 and 125 of the Criminal Act, cruel act (3) AAP(arrest & confinement) (4) AAP(Violence in Articles 124 and 125 of the Criminal Act, cruel act)

Table 12

Statistics of petitions received on torture and ill-treatment by NHRC

[Statistics of Petitions on Torture and Ill-treatment Received by the NHRC]

(period: 2016–2020)

(unit: case)

	Total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1,277	346	284	229	188	230
Prosecutor	27	11	9	2	3	2
Police	1,250	335	275	227	185	228

[Statistics of Petitions on Torture and Ill-treatment Proceeded by the NHRC]

(period: 2016–Oct. 2020)

(unit: case)

Year of closure	Category	Total	Remedy of rights					Rejection	Referral	Dismissal	Suspension of investigation
			Subtotal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to impose a disciplinary action	Closure with settlement	Resolution during investigation				
Total	Total	1,229	75	28	3	8	36	502	12	622	18
	Prosecutors	26	4	4	–	–	–	11	–	10	1
	Police	1,203	71	24	3	8	36	491	12	612	17
2020. 10.	Subtotal	165	19	10	3	1	6	52	–	89	2
	Prosecutors	1	–	–	–	–	–	1	–	–	–
	Police	164	19	10	3	1	5	54	–	89	2
2019	Subtotal	204	7	4	–	1	2	72	–	124	1
	Prosecutors	3	1	1	–	–	–	1	–	1	–
	Police	201	6	3	–	1	2	71	–	123	1
2018	Subtotal	255	14	6	0	2	6	108	4	128	1
	Prosecutors	8	2	2	–	–	–	2	–	3	1
	Police	247	12	4	–	2	6	106	4	125	–
2017	Subtotal	243	15	4	0	2	9	111	1	111	5
	Prosecutors	7	1	1	–	–	–	4	–	2	–
	Police	236	14	3	–	2	9	107	1	109	5
2016	Subtotal	362	20	4	0	2	14	156	7	170	9
	Prosecutors	7	–	–	–	–	–	3	–	4	–
	Police	355	20	4	–	2	14	153	7	166	9

Table 13

Recommendations in Connection with Prevention of Torture Made by the NHRC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02	1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the prosecutor for investigation on acts of cruelt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 police station.	Others
2003	2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conducting human rights training for employees to prevent acts of cruelty such as overnight investigations by practice and use of abusive language.	Accepted
2003	3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the prosecutor for investigation on violence and acts of cruelt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thers
2003	4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for investigation to prosecutors on acts of cruelt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 ○○ police station.	Others
2003	5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for investigation to prosecutors on acts of cruelt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on police officer's death.	Others
2003	6	Recommend for Disciplinary	Recommend ○○ ○○ Senior Superintendent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respondents for not notifying the Miranda principle and making assaults.	Not Accepted
2004	7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warning respondents over the use of abusive language and overnight investigati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conducting human rights training to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ccepted
2004	8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conduct human rights training for respondents on their use of abusive languages during the naked body search and recommend Commissioner General to prepare a detailed guideline on the method and procedure of naked body searches.	Partially Accepted
2005	9	Prosecuted	Recommend the Prosecutor General to prosecute and initiate investigation on the relevant personnel for violence and acts of cruelty; recommend Commissioner General ○○ to warn in written form to the related personnel and commander; recommend Commissioner General to improve measures and conduct in-house training on overnight investigation.	Others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05	10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he head of agency for warning measures imposed on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deputy director of criminal affairs division) and five investigative officers on violation of personal right, right to rest, right to liberty, etc.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of robbery, murder, etc.	Accepted
2005	11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o warn the respondent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complainant's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sleep, right to rest) was violated due to overnight investigation.	Accepted
2005	12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act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complainants and 000's personal right, right to liberty, right to sleep and right to rest were violated due to overnight investigation.	Not Accepted
2005	13	Recommend for Disciplinary	Recommend to impose disciplinary and 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for acts of cruelty such as violence.	Accepted
2006	14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towards the respondent and in-house training for the staff in charge of investigation, considering that the respondent from the ○○○○ police station has conducted an overnight investigation without consent or permitted procedure from the complainant.	Accepted
2006	15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Prosecutor General to investigate the police officers who beat the complainant when the person exercised his/her right to remain sil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fter an emergency arrest by a police officer at the ○○ police station, and recommend Local Commissioner General to conduct in-house training for the complainant for the act of having a hostile person other than the complainan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confiscation.	Accepted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06	16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 Local Commissioner General to take in-house human rights training and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as a police officer of the ○○ police station district violated due process while investigating the complainant in the locker room, and stabbed the complainant's neck with a screw driver which was confisc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Accepted
2006	17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to have in-house training on the respondents to prevent similar cases, considering that since it was difficult to deem that there was consent from the complainant during the late-night investigation or that such late-night investigation was inevitable, complainant's right to pursue happiness was infringed upon.	Accepted
2006	18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officer in charge, considering that a police officer of the 000 police station made an emergency arrest on the complainant and made the person wait until dawn for seven hours and then conducted late-night investigation with no consent or permission.	Accepted
2006	19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officer and to take in-house training of the staff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considering that a police officer of the 000 police station took late-night investigation without the consent from the complainant.	Accepted
2007	20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hat the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since a police officer from 0000 police station investigated the complainant all night.	Accepted
2007	21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recognizing that a police officer from the ○○ police station conducted a late-night investigation of the complainant until dawn.	Accepted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07	22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s, recognizing that the complainant was under investigation wearing handcuffs and ropes when he was detained at ○○ police station.	Accepted
2007	23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complainant, recognizing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pondent having failed to pay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suspect is acknowledged, the late-night investigation was conducted without consent and permission, and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with the complainant in handcuffs in the absence of specific risk.	Accepted
2007	24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the respondents and have in-house training for relevant staff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recognizing the fact that a police officer from the 0000 police station had investigated the complainant without consent and had took saliva by forcibly opening his/her mouth.	Accepted
2007	25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recognizing the fact that it was found during the investigation that a police officer of the 0000 police station had investigated the complainant until late night of three in the morning.	Accepted
2007	26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hat the respondent, the assistant inspector 00, and senior police officer 000 be given warnings, considering that the police officer at the 000 police station investigated the complainant all night for 14 hours and the assistant inspector participated as an investigative officer even though the person should not have since the person was personally aware of the victim of the criminal case.	Accepted
2007	27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considering that the police officers from the 00 police station had conducted an investigation with the complainant handcuffed for about two hours.	Accepted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08	28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and to have relevant staff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detention take training, considering that the victim accused of adultery who did not comply to the discretionary investigation washandcuffed excessively during the investigation.	Accepted
2008	29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have the respondents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take special human rights trainingcourses by the NHRC, considering the police officer from the ○○ police station had arrested and assaulted the complainant in the car while going to the ○○ police station.	Accepted
2008	30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provide training to the respondent on lawful use of police gears, considering that a police officer from the 0000 police station excessively used police gears on the complainant.	Accepted
2008	31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on the respondent, considering that respondent from the ○○ police station caused assaults with kicks and fists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e complainant.	Accepted
2009	32	Recommend for Remedy	Conducting a late-night inspection for two days and not giving the necessary time to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young children (one and three years old) during vacation and having them respond to inspection are deemed to have violate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Recommend the Commissioner of the District Police Agency to establisha regulation prohibiting late night inspection in principle,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raining to prevent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s to what described in the complaint.	Accepted
2009	33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the head of the respondent's agency to warn and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assault when juvenile suspects are arrested, late-night investigation without parental notice and threats used during the investigations	Partially Accepted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10	34	Prosecuted	<p>Prosecute the perpetrators of the ○○ police station to Prosecutor General pursuant to Article 48 of the NHRCA on the charge of assault and acts of cruelty stipulated in Article 125 of the CA.</p> <p>Request Prosecutor General based on Article 34 of the NHRCA to investigate the perpetrators of torture who are likely to have committed assaults and acts of cruelty prescribed in Article 125 of the CA. Recommend Commissioner General to conduct an overall inspection of the relevant police station</p>	Others
2010	35	Recommend for Remedy	<p>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conduct job training for Respondent 2 for not receiving a prior consent statement before overnight investigation</p> <p>Recommend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on Respondent 3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handing over the list of charges to a civilian</p>	Accepted
2010	36	Recommend for Remedy	<p>For Victim 1's identity verification faced difficulty and the victim argued oneself as a suspect, it may not be deemed that Respondents 1, 2 suspected the victim as a suspect on purpose;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failed to collect the fingerprints even though they should have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and detention ignited the cause of the case that the victim was unjustifiably detained in a detention center for 72 days. As such, the responsibility falling under the respondents is deemed grave, and thus taking disciplinary measures and mak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were considered; however, such facts may not be reflected as Respondent 1 already received a "reprimand", and "warning" was imposed on Respondent 2 for the same reason with that of the complaint. Also, as having failed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victim sent to the Prosecutors'Office and had him/her face labor imprisonment, Respondents 3, 4 were deemed to have infringed the freedom of liberty of the victim.</p> <p>As a result, recommend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to make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p>	Accepted

Decision Year	No.	Decision Result	Recommendation Details	Implementation Status
2010	37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to give a reprimand to the respondent, Kim, for swearing and kicking the shin when the complainant denied the allegations was a violation of personal liberty and the freedom of liberty.	Accepted
2010	38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to take precautionary actions to the respondent's team, Criminal Affairs Division 3, considering that inspection of the crime scene at a late-night investigation without the complainant's consent is deemed to have infringed the complainant's right to sleep and rest derived from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n accordance to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Recommend conducting in-house human rights training to relevant staffs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to prevent similar cases from recurrence.	Accepted
2010	39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Prosecutor General to investigate on the criminal acts stipulated in Article 125 of CA against the respondents who committed acts of cruelty and aiding abetting the 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on the complainant. Recommend Commissioner General to take disciplinary actions on using excessive use of equipment of the respondents and unreasonable late-night investigation, and to review the system related to body check of suspects and surveillance cameras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Others
2011	40	Recommend for Remedy	Recommend Senior Superintendent ○○○○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respondents and to provide training about related task such as the use of handcuffs to the staff members of the police s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s, considering that the respondents violated the complainant's freedom of liberty by having the complainant handcuffed for three hours and 20 minutes in total during the investigation.	Accepted
2011	41	Request for Investigation	Request Prosecutor General to investigate the alleged assault and acts of cruelty of the respondents under Article 125 of the CA since the respondents are deemed to have committed acts of cruelty against the complainant during the arrest and investigation process.	Others

Table 14

Details and Methods of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Decree of NK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Decree Article 12 (Details and Methods of Examination),

- i) whether the person constitutes a North Korean refugee considering the place of birth, occupation, family relations, etc.;
- ii) and whether the person is deemed not to be protected considering the motive of escape from North Korea and the criminal records, etc.

The investigation may be conducted by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etc., and the investigation period and the temporary protection period for medical treatment, settlement training, etc. shall not exceed 90 days pursuant to the acts.

Table 15

Material Conditions of Waiting Zone

Living Facilities	Common room lounges for men, women and family separately (3), Bedrooms (6), Bathrooms (3)
Furnishings & Amenities	A Sofa and magazine rack, Televisions (2), Water dispensers (2), Personnel lockers (6)

Table 16

Number of MOJ-UNHCR Joint Training Sessions by Year

Year	October 2020	2019	2018
Numbers of Sessions (Number of Participants)	4(97)	9(256)	6(311)

Table 17

Details on Refugee Committee

Refugee Committees are composed of a total of 15 including 6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fugee related affairs and 9 external professional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refugees (judges, attorneys at law, professors, officials related to human rights group, etc.) appointed (commissioned)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Refugee Act*

Table 18

Decisions on Arrivals of Yemini Asylum Claimants in Jeju>
(Last Updated: 31 October 2020, unit: person)

Total	Determined				Pending			Ex Officio Closures**
	Sub-Total	Refugee Granted	Humanitarian Status Granted	Refused	Sub-Total	First Instances	Appeals	
550*	521	4	501	16	3	0	3	26

* A child born in the ROK is included

** Ex Officio closures include, but not limited to, asylum claimants who return their Residence Cards and leave the ROK permanently.

Table 19

Statistics related to Parole (Year 2017–2020)

Category	November 2020	2019	2018	2017
Total No. of Persons Released (End of Sentence +Parole)	25,443	29,187	30,452	31,596
No. of Persons Paroled	7,294	8,174	8,693	8,275
Percentage of Parole Released (%)	28.7%	28.0%	28.5%	26.2%

Table 20

Statistics on the Ratio of Inmates to Capacity
(May 2017–April 2021)

Year	Ratio of Inmates to Capacity (%)
May 2017	122.1
2018	113.3
2019	112.7
2020	111.0
2021	105.7

* The reception spaces are expanded due to construction of the Northern Gangwon Center (correction), extension of the reception buildings of the Gwangju, Cheongju, Gunsan and Gyeongbuk3 Centers (correction) and remodeling of the reception buildings of Seoul and Incheon (detention). The area of the living room per inmate is 3.34m² as of April 2021.

** The Geochang Detention Center will be completed in 2022, and the MOJ plans to reduce overcrowding by securing reception spaces with the projects to construct the Northern Gyeonggi (detention) and Hwaseong Women's (correction) Centers, to move and construct the Jeonju, Wonju and Changwon (correction) Centers and to extend and remodel the reception places of the Cheongju, Cheonan, Mokpo and Gangneung (correction) Centers, etc.

Table 21

Number of Additional Prison Guards, Medical Personnel and Public Health Doctors

	Prison Guards	Medical Personnel*	Public health doctors
2017	25	5	1
2018	108	13	4
2019	97	4	16
2020**	345	6	20
Total	575	28	41

* Including doctors, nurses, pharmacists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s

** The number of inmates per prison guard and medical professional in 2020 is 3.3 and 157.1 respectively

Table 22

Rules on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1.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warden among lawyers, persons who hold a position of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teaching law at university, persons recommended by the correctional council (referring to a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all correctional members), or outside personnel, who have muc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orr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1 of the CIA and Article 223 of its Enforcement Rules and
2. In cases where a member committed misconduct related to the duties, a member is deemed unsuitable due to negligence, damage to dignity or other reasons, a member expresses the intention that it is difficult to conduct their duties, or the impartiality is at risk due to biases over specific religion or ideology, the member may be dismembered so that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members with impartiality,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Table 23

Statistics on Number of Death in Custody and their Cause of Death (2017-2019)

Category <

Table 24

Directive on Military Unit Manag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Volume 4 Prevention of Accidents, Section 3 of the Chapter 8 Reporting of Accidents and Processing

Directive on Unit Manag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Volume 4 Prevention of Accidents, Section 3 Accident Renewed Punishment of Chapter 8 Accidents Reporting and Processing

Article 268 (Definition)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Ordinance shall be as follows:

1. The term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means the person who provided the direct cause and motive for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2. The term "related personnel to the accident" means the person who directly directs and supervises the accidents or is in relevance to the line of responsibility
3. The term "1st commander and supervisor" refers to a primary supervisor who directly commands and supervises the people in the similar level
4. The term "2nd and 3rd commander and supervisor" refers to the 1st commander and supervisor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nd the 2nd commander and supervisor who had the responsibility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commander and supervisor in the case of accidents

Article 270 (The Scope and Standard of Subject of Punishment)

- ① The Accident Response Committee decides through examination on the target and scope of censure of the major accidents including command report accident
- ② The Accident Response Committee deliberates on the object of censure by the 1st, 2nd and 3rd command supervisors and related staff in consideration of the accident results and impacts by types of accidents.

Table 25

Opening Judgment to Public by the Military Court

Article 67 (Opening Judgment to Public) of the Military Court Act

- (1) The hearings and sentence of judgment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only when such hearings and sentences are likely to disturb the public peace and order, or there is a need to protect military secrets, the hearings of judgment shall be allowed not to be open to the public by ruling of the military court.

Table 26

Operation Status of the National DefenseHelp Call Center

Year	As of 30 November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No. of Complaints / Counsels	53,235	48,932	61,455	64,149	57,990	40,482	17,258	5,039

* Reference : Year 2000 NDSTA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peration of National Defense Help Call Center)

** It receives counseling related to suicide, distress in military units and reporting/counseling in connection with military-related crimes and taking necessary follow-up measures. The "Help Call" is derived from the Lifeline of the Army that benchmarked the Lifeline in the private sector to prevent suicide of military soldiers in March 2008, and the Lifeline of the Army was expended into the Lifeline of the Military in January 2012 as the necessity to operate it across the nation was pointed out in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in 2011. The lines for crime reporting operated by each military unit and military police were integrated from August 2013 into the Help Call helpline with the national specific code "1303" acquired. The Help Call helpline is available 24/7 for reporting/counseling via call and online (internet, intranet).

When distress suffered by soldiers, crime damage, etc. are received through the Help Call, the relevant officials review such issues and notice the commander of them, or request the investigators (military police) or inspectors to check the relevant fact and take necessary measures, preventing violence and human rights violation in military units.

Table 27

Outcome of Investigation on Assault and Acts of Cruelty within the Military (11-30 September 2017)

	Assault		Acts of Cruelty	
	Experiences	Witnesses	Experiences	Witnesses
Executive	0.2%	1.8%	0.6%	2.5%
Soldier	1.0%	1.5%	1.6%	2.7%

Table 28

Main Projects at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Investigation·Research·Material Services) colle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terials, publish translations, operate digital archive, etc.
- (Education·Promotion) operate web magazine, organize academic colloquiums, etc.
- (External Affairs) create contents in English, organize international conferences, etc.

Table 29

State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State)

- (1) The State shall make active efforts at home and abroad to restore the honor of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promote human rights, find the truth regarding the issue, and provide correct history education, etc. The State shall also secure an organization and budget required for these efforts. <Amended by Act No. 12533, Mar. 24, 2014>
- (2) The State shall actively find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at home and abroad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y are able to maintain a stable livelihood. <Amended Act No. 12533, Mar 24, 2014>
- (3) Where the State formulates a policy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i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victims(including their agents) and actively make public the details of the policy <Newly Inserted by Act No. 15207, Dec. 12, 2017>

Table 30

Support According to Article 4 of the *Act on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ve Projects 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1. Livelihood benefits referred to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2. Medical benefits referred to in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3. Assistance for the expenses he/she borne and expenses in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referred to in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4. Payment of subsidies for livelihood stability;
5. Nursing services;
6. Funeral expenses;

Table 31

MOGEF's Commemorative Projects related to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 (i) Ope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ii) Exhibition
- (iii) Support for being listed on UNESC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CWA, and has designated 14 August as the day of commemoration, holding commemorative ceremonies for sexual slavery victims drafted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ble 32

Legal Aid Service for Migrant Workers

Category	Target Group	Charges
Legal counseling	Limitless	Free of charge
Litigation Attorney	In the case of free recipients determined by the Corporation, such as late payment victims, seafarers and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Free of charge
	Except for those who are free recipients	Charged

Table 33

Status of the Shelters of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s

Shelter Location	Number of Shelters
Gyeonggi	6
Chungbuk	1
Gyeongbuk	2
Gyeongnam	1
Ulsan	1
Gwangju	1
Jeonnam	3
Gangwon	1
Jeju	1
Total	17

Table 34

Reasons for Foreign Workers (E-9)' Chang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in accordance to Article 25(1) of the *Act of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1. If his /her employer intends to terminate his/her employment contract during the contract period, or intends to refuse renewal of his/her employment contract after its expiration, on a justifiable ground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gives public notice, as he/she deems, under a social norm, that the foreign worker is unstable to continue to work i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on a ground not attributable to him/her, such as temporary shutdown, closure of business, cancell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under Article 19(1), limitation on the employment under Article 20(1), provision of a dormitory in violation of Article 22-2, or his/her employer's vio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r unfair treatment
3. Where any other cause or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Table 35

Details of the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System

With the amendment thereto, the guardhouse detention under which soldiers may be detained without warrants was abolished from 5 August 2020, and instead thereof, the MND has operated the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System, comprised of the fundamental training for two days including common and customized programs for correction and reformation and the complementary training for up to 13 days including programs for characters and physical strength. The MND expects to enhance the strength of the military and become more reliable by meeting the purposes of maintaining the military discipline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with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System.

Under the Military Discipline Training System, a substitute for the guardhouse detention, the trainees shall gather at a designated training site and take the training. The training period is designated to be one day or more and up to 15 days by the Disciplinary Committee based on the gravity of misdeeds. The training time per day is a total of eight hours including two hours for counseling, same as the working hours of general soldiers. During the rest of the time, the trainees may have free time at their barracks, but may not use the welfare facilities or the cellphone.

The training program is comprised of the fundamental training for two days and the complementary training for the rest of the training period. The fundamental training program includes the training on military act, human rights,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ecurity, and emotion control provided by a professional counselor and counseling, and for the rest of the period, each training institution provides various programs including watching of videos about character, voluntary service, environment preservation, preparation of a review statement or thank-you letter and physical training

Table 36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s on MHA

The whole amendment includes the subject of hospitalization for protec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hospitalization to ensure the reasonable purpose, the proper means and the minimum infringement. The said Act was amended:

- i)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hospitalization for protection, from ‘necessity for hospitalization or risk of self-injury or injury by others’ to ‘necessity for hospitalization and risk of self-injury or injury by others’
- ii)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for hospitalization, to introduce the diagnosis system involving two psychiatrist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asure to prevent a chance of abuse based on the judgment of whether hospitalization is needed or not. In addition, to strengthen relief of rights, mandatory reporting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system of examination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and face-to-face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or are introduced.
- iii) Hospitalization with consent was newly inserted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provided in Article 12(1) of the Constitution, while the interval of confirming the intention of discharg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was shortened.

Table 37

An Example of National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e Government found two persons from Central Asia who sent USD 960 and USD 2,000, respectively, to a terrorism group linked to al Qaeda in the course of performing counter-terrorism investigation and tracking of terrorist su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CTA, and sentenced them, respectively, to 18 months in prison in May 2020 and 12 months in prison in September 2020 for the violat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concluding the judicial process on the charge of financing terrorism.

Table 38

Efforts mad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in other Situations of Confinement

Facilities	Actions
Korea Correctional Service	<p>(i) Frequently conducts COVID-19 tests on all inmates and worker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quarantine authority, provides all inmates with KF94 facial masks every day and makes efforts to reduce overcrowding by expanding parole and through adjusted transferring to prevent COVID-19 and stop spread thereof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ii) When new inmates are admitted, they receive a preemptive testing including a rapid antigen test and are quarantined for three weeks. Only those who tested negative in a PCR test they receive before the end of the quarantine period may be admitted in general wards.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makes its best efforts for inmate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properly by referring the confirmed cases with underlying disease to outside hospitals specialized in infectious disease and immediately suggesting a stay of execution, and referring the asymptomatic confirmed cases to community treatment centers and providing isolated treatment, etc. (iii) Also, it discloses the quarantine status by operating a COVID-19 bulletin board for public communications and sending more mails and making more calls, etc., helps the confirmed cases seek psychological stability by explaining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treatment plan in detail and providing medical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frequently providing not-confirmed inmates with video training on the quarantine activities to prevent infection and the prevention of COVID-19 delivered by an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 (iv) Furthermore, the COVID-19 Response Team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MOJ serves the role of a control tower of the institutions with confirmed cases, revises the manual to respond to COVID-19 and prepares and operates the individual quarantine measur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rrectional institution. (v) With government-wide cooperation, the author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establish infrastructure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and their spread and to prepare measures to have all inmates vaccinated for COVID-19.</p>

Facilities	Actions
Foreign Detention Facilities	<p>The MOJ is putting in efforts to prevent infection in foreigner detention facilities by offering PCR testing for the workers of detention centers and the foreign detainees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rns over the spread of COVID-19 in foreigner detention facilities, and providing foreign detainees with facial masks and having them wear them, etc. Also, it actively applies the temporary lifting of detention to the marginalized foreign detainees including patients and elderly persons. From 21 January 2021, the <i>Immigration Act</i> was amended to implement the bond deposit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departure order under which a departure order may be imposed with a deposit of a bond for implementation, to minimize detention.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aircraft under operation is decreased in each country, an error occurred in the execution of deportation. The MOJ tried to make the relevant country cooperate and schedule the deportation-specific plan for the first time to prevent detention from being prolonged by repatriating the foreign detainees earlier.</p>
Juvenile Detention Centers	<p>The juvenile detention centers have operated the detailed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by stage of social distancing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s, as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adjusted the stage of social distancing. To be specific, the inmates have general visit, visit for investigation, etc. in a closed visit room for quarantine, and general visit is suspended at the stage of 2.5 or higher of social distancing, but much efforts are made to minimiz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minor inmates with remote video interview, etc. In addition, a doctor stays in the facility and provides medical treatment, and when the doctor deems that outside treatment is needed, the center takes measures for the patient to receive treatment without delay in line with the quarantine rules. As the centers have minor inmates regularly receive a medical checkup to find any health issues, provide COVID-19 testing for all workers, new minors, minors with a symptom as a preemptive quarantine measure, and seek health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infection of minor inmates by making them wear a face mask all time and comply with personal hygiene practices, there have been no COVID-19 confirmed cases in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s to date.</p>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p>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has actively taken the preventive measures such as complying with the MND's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disinfecting the accommodation buildings once a day, measuring temperature of all military inmates twice a day, providing one face mask per day, limitedly approving the entrance of outsiders, installing acrylic stands in the restaurants of the accommodation buildings, and extending the quarantine period for new inmates from two weeks to three weeks. Also, it tries to find potential or asymptomatic patients by making COVID-19 testing mandatory for transfer. The "Smart Visit" system which had been allowed only for family members is now allowed for family members as well as acquaintances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 of inmates and protect the right to interview and communication that may be caused from COVID-19, and by installing one more smart visit room added to one existing room for seamless operation, inmates may</p>

Facilities	Actions
	have visits in an equal mann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mote video interview with a state-appointed lawyer to guarantee an opportunity of legal counseling which is unlikely to gain attention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pretrial inmates who appointed a state-appointed lawyer have a better interview environment. The Military Correctional Institution seeks correction and reformation and sound reintegration of inmates while the prevention of infection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and the treatment for inmates are guaranteed.
Sanatorium	<p>The admission and leaving of a sanatorium for senior citizens is based on the intention of inmates under an agreement. As an inmate wa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20 January 2020), the guidelines on responding to COVID-19 at a long-term care institution*(January~November 2020, 1st~7th edition) have been distributed to protect inmates and workers from the spread of infection. The workers must receive PCR testing once a week, and those with symptoms, etc. frequently undergo rapid antigen tests. Subsidies for temporary quarantine support are provided for disease control activities in such facilities. In addition, a nursing hospital and an internal response team were launched in the COVID-19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hereinafter, "CDMH") to rapidly respond to an outbreak of collective infection.</p> <p>* including management of infection prevention, management of admission and leaving, intact interview, countermeasures against the occurrence of suspected or confirmed cases</p>
Psychiatric Hospitals	<p>To respond to the occurrence of back-to-back collective infection of COVID-19 of mentally ill persons, the psychiatric hospital and the internal response team of the CDMH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responding to COVID-19 at mental healthimprovement facilities, asymptomatic and mild COVID-19 patients are transferred to the beds specialized for the treatment of mentally ill persons, and those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or severe symptoms are transferred to the hospitals dedicated to infectious diseases. Also, as collective infection of COVID-19 occurred in a mental medical institution, the facility standards for hospital wards, etc. are amended and enacted from 5 March 2021 to prevent infection and strengthen control in mental hospitals with a high-risk of infection, with widening the area of hospital rooms of mental hospitals (single-bed room 6.3m²→10m², multi-bed room 4.3m²→6.3m²), reducing the number of beds in a hospital room (10 beds→6 beds) and extending the distance between beds (1.5m)</p>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The Sixth Periodic Report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 발행처 법무부 (인권정책과)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법무부(1동)

|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1117-14

| 인쇄처 디자인페이지플러스

* 해당보고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